

# 제358회 국회 청년미래특별위원회회의록 제 7 호 (임시회)

국회사무처

일 시 2018년3월22일(목)

장 소 제5회의장(220호)

### 의사일정

1. 제2차 청년정책 토론회
  - 청년사회안전망 강화(주거, 부채, 보험 등)
  - 청년정책 전달체계 강화(책임부처, 중앙정부와 지자체협조보완 등)

### 상정된 안건

1. 제2차 청년정책 토론회 ..... 1
  - 청년사회안전망 강화(주거, 부채, 보험 등)
  - 청년정책 전달체계 강화(책임부처, 중앙정부와 지자체협조보완 등)

(10시10분 개의)

○위원장 **이명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8회 국회(임시회) 제7차 청년미래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좀 추웠는데 다시 봄 날씨로 회복되는 것 같습니다. 청년이 봄으로 상징되는데 우리 청년들한테 정말 좋은 봄날이 왔으면 합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회의에 이어서 우리 특별위원회 열세 분의 자문위원 중에서 여섯 분의 자문위원님을 모시고 제2차 청년정책 토론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오늘 회의도 국회방송에서 생중계할 예정이니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오늘 토론회와 관련해서 관계 부처인 국무조정실의 김달원 사회정책총괄과장, 기획재정부의 이주섭 일자리경제과장, 고용노동부의 김덕호 청년여성고용정책관, 여성가족부의 이진정 여성정책국장, 국토교통부의 김홍진 주택정책관께서 함께 배석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 토론회에 황인국 자문위원님, 엄창환 자문위원님의 소개로 청년참여연대 그다음에 청년 관련 단체에서 열두 분이 함께 방청하고 있다는 말씀을 알려 드립니다.

### 1. 제2차 청년정책 토론회

- 청년사회안전망 강화(주거, 부채, 보험 등)
- 청년정책 전달체계 강화(책임부처, 중앙정부와 지자체협조보완 등)

(10시12분)

○위원장 **이명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차 청년정책 토론회를 상정하겠습니다.

오늘 토론을 위해서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또 자문위원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우선 앞서 이미 위촉장을 드렸습지만 오늘 참석해 주신 여섯 분의 자문위원님을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받은 자문위원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가볍게 목례로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김가람 한국청년회의소 중앙회장이십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석호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님이십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송보희 한국청년정책학회 학회장이십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안현종 전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 대의

협력팀장이십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엄창환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대표이십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황인국 한국청소년재단 이사장이십니다.

(자문위원 인사)

거듭 오늘 바쁜 시간 내주신 자문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회 진행 순서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청년사회안전망 강화와 청년정책 전달체계 강화를 주제로 해서 여섯 분 발제자의 발표를 차례로 먼저 들은 다음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토론회는 위원회 회의로 진행되기 때문에 질의는 위원님들만 하실 수 있습니다. 발제자께서는 발제자 상호 간 토론이 오늘은 여기에서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함께 유념해 주시고 앉으신 자리에서 7분 정도로 주제의 범위 내에서 발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분이라고 하는 시간이 법정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편의상 설정한 시간이니까 혹시 꼭 필요한 부분이나 또 7분을 꼭 채워야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신축적으로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김가람 자문위원님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문위원 김가람 반갑습니다. 저 김가람이라고 합니다.

보통 청년회의소를 JC라고 하지요. 저희가 정책을 연구하는 기관은 아니어서 내용이 좀 부족할 수는 있지만 이 자리에 이렇게 참석한 것만으로도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N포세대’라는 말은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실업률 또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것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사실이실 것 같고요.

현재 청년세대의 46.5% 정도가 수도권에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수도권에 일자리가 집중되어 있고요. 특히 대기업과 관련된 일자리들은 수도권에 많이 집중되어 있는 현실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수도권의 집값은 지방에 비해서 많은 격차가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

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고 또 집값이나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나마 임금이나 조건이 좋은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으로 취업이 몰리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집값의 부담이나 청년들의 어떤 부채가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청년들의 시름이 깊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안을 해 보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중소기업들은 반대로 일손이 부족한 현실이지요. 그래서 중소기업에 취업한 우리 청년들에게 어떤 혜택을 주게 되면 중소기업에 대한 일손부족 현상도 해결할 수 있고 청년들의 취업난 또한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중소기업 취업 청년들을 대상으로 실질적인 세제혜택 및 주거부채의 부담을 좀 줄여 준다면 우리 청년들이 일자리를 구하는 데 있어서 대기업뿐만이 아니라 조금 더 중소기업에도 많은 관심을 갖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현재 시중은행의 전세자금대출 평균 이자율이 3.2% 정도인데요. 우리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에게 이자를 약간 보전해 준다든지 그렇다라고 하면 임금 격차도 좀 해소할 수 있을 것 같고 중소기업에 취업하고자 하는 청년들에게도 나름대로 메리트가 생길 것 같습니다. 또한 세금감면 및 기타 지원에 대해서도 제 발제자료를 나와 있으니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해결방안이 있겠지만 저희는 중소기업에서 반대로 겪고 있는 취업난을 해결함과 동시에 또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에게 나름대로 이런 혜택을 준다면 두 가지 모두 충족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발표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수 시간을 많이 절약해 주셨는데 지금 청년세대의 경제활동 환경 변화에 대한 실질적인 대상의 한 분으로서 어려운 고충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여튼 감사하고요.

자, 그러면 다음은 김석호 자문위원님 발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문위원 김석호 안녕하십니까? 서울대학교 사회학과에 있는 김석호라고 합니다.

여기에 오게 된 계기는 지금 제가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는데요. 저희 연구소 내의 미래세대연구센터라는 연구조직을 한 3년 전부터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 또는 실질적인 정책 결과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자료의 축적과 연구 결과의 생산을 지금까지 해 오고 있고요.

아마 오늘 말씀드릴 내용도 다른 분들이 말씀해 주실 내용보다는 조금 이론적이고 재미가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절약해 주신 게……

제가 좀 길게 해도 되는 겁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이명수** 예, 꼭 필요한 말씀이면 7분이라는 시간에 너무 구애받지 마십시오.

○**자문위원 김석호** 예, 알겠습니다.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구팀을 구성해서 지난 한 3년간 교수 5명 정도가 계속 연구를 해 왔는데요. 현시대를 저희는 일종의 전환기라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전환기는 어떤 이론적인 설명보다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청년의 선배세대가 누리고 있던 어떤 삶의 정상성, 쉽게 말씀드리면 대학교 졸업하고 취업하고 가정을 꾸리고 출산과 육아를 하게 되는, 우리가 사회적으로 아주 정상적이라고 과거에는 받아들여졌던 그런 어떤 삶의 경로들이 이제는 다른 방식으로 재구성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런 상황, 일종의 전환기 속에서 세대별로 봤을 때, 청년세대가 어떤 자원의 소유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가장 취약한 세대일 수밖에 없고 그런 전환기에 사회적 위험에 가장 노출될 수밖에 없다라는, 예를 들면 실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라는 의미로 전환기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환기에 삶의 어떤 취약성·취약화에 대한 수치들이 언론이나 이런 정책연구들을 통해서 많이 제시되어 있는데요.

여기 그림을 보시면, 기본적으로 전체 취업자 중에서 청년 비중을 보시면 계속 감소 추세에 있다라는 거고요. 그림으로 나오지는 않았지만 교육기관이나 노동시장에 없는, 그러니까 실제로 취업을 포기한 청년들이 2015년 기준으로 9.2%에 달한다라는, 2018년 기준으로 18.5%라는 이런 수치들이 많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먼저 발표하신 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양질의 일자리가 수도권에 몰려 있고 그리고 모든 구직자들이 소위 대기업이라든가 공공기관이라든가 양질의 일자리를 원하는 상황에서 정작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다고 아우성이고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들은 능력 있는 사람이 없다고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 것은, 이게 지금까지 청년정책이나 청년 연구자들의 어떤 기본적인 접근 방식이었는데요. 일자리나 주거나 가족이나 결혼이나 이런 문제들을 중심으로 접근을 했었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정부의 정책들이 청년을 대상으로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몇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 그 문제점들이 저희가 보기에 지나치게 일자리·주거·출산·결혼의 문제에 집중되어 있고, 특히 일자리 문제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청년들한테서 나타나는 어떤 변화의 양상이라든가 그리고 인구구조의 변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지 못한다라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런 변화들을 고려했을 때 청년정책은 일자리뿐만 아니라 노동의 의미라든가 문화라든가 청년세대 내 이질성이라든가, 그러니까 청년세대도 같은 청년이 아니라 다른 청년들, 그러니까 사회·경제적 자원에 있어서의 격차라든가 문화적 다양성이라든가 또는 정치화의 문제들 이런 문제들을 동시에 고려하는 청년정책을 우리도 좀 그려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정부의 청년정책에 대한 진단을 간단하게 여섯 가지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전에 20페이지 보시면 표1이 제가 2018년 1월 기준으로 해서 정부 부처별 청년정책을 정리해 본 겁니다.

여기 보시면 정책 내용과 대상 그리고 실제로 어떤 정책들을 수행하고 있는지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맨 오른쪽의 항목들을 보시면 대부분 일자리 문제에 집중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여기에서 교육·노동부 것은 제가 실수로 아마 누락한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이 그림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정리하기 전에 설명드리면 여기 17페이지에 ‘흙수저’ ‘금수저’ 나와 있잖아요.

이게 뭐냐 하면, 저희가 지금 서울대학교 흙수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대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을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스스로를 흠수저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의 의식구조와 금수저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의 의식구조인데요. 흠수저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의 의식구조를 보면 취업이라든가 안정적인 삶, 소소한 행복, 소박함, 부모, 이런 것들에 집중해 있는 반면 스스로를 금수저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은 미래의 어떤 직업적 전망이라든가 전문성, 연구, 그리고 교수와 관련된 어떤 학점들 이런 것들에 집중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흠수저와 금수저라고 불리는 학생들이, 그러니까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하는 학생들의 의식구조 자체가 그리고 어떤 삶의 전망이라는 게 이렇게 큰 차이가 있다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런 그림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정부의 청년정책이 보다 중장기적인 전망을 가지고 이런 다양성을 포괄하는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18페이지 보시면, 마지막 패러그래프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정부가 내놓은 정책의 문제점들을 한 여섯 가지 정도로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근시안적 접근,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요. 뭐냐 하면 인구구조라는 게 2040년 이후에 급격하게 역삼각형 인구구조로 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그런데 아까 그 표에서 보신 정부의 정책들은 어떤 단기적인 대중적 처방, 그러니까 결국에는 주거 지원이라든가 청년을 고용하는 중소기업에 지원금을 준다든가 또는 일자리 수를 늘린다든가 이런 처방에 좀 급급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측면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일자리·주거 문제에 너무 지나치게 초점을 두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단면적 접근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지적을 해 봤고요.

세 번째는 연구자로서 느끼는 한계인데요.

실제로 청년 문제를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지만 청년 관련된 신뢰할 만한 자료가 축적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국 사회에. 그래서 청년 연구 관련 R&D 예산을 조금 더 배정을 하고 그런 연구 결과들을 축적해서 정책으로 이어지게 하는 선순환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다시 말해서 좋은 자료의 축적 없이는 효과적인 청년정책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겠지요.

그다음으로는 비체계적 접근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편집이 좀 잘못된 것 같은데……

23페이지 표2 한번 보십시오.

23페이지 표2 보시면, 청년지원 정책인데 사실 비슷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각 부처는 서로 다른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실제로 정책의 내용이라든가 어떤 효과라든가, 기대효과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중복이 심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따로 설명을 안 드려도 청년정책이 지나치게 중앙, 수도권 중심적이라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지방의 청년들을 고려하지 않는다라는 게 아니고 지역의 어떤 특색이라든가 그 지역으로 청년인구를 유인할 수 있는 정책들이 부족하다라는 지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청년들을 지나치게 정책의 수동적 수혜자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청년 문화나 청년의 정치 참여 양상을 보시면 청년들이 어떤 대안적 문화활동이라든가 사회적 가치에 입각한 사회적 경제라고 하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기존의 어떤 운동의 문법과는 다른 문법으로 정치조직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치권 정책결정 과정에서 항상 과소대표될 수밖에 없는 자신들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그들에 대한 어떤 지원이라든가 청년 시민사회 활성화에 관한 정책들이 전무하다라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22페이지 보시면, 향후 정부의 청년정책과 입법의 방향이 어떠해야 하나라고 했을 때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내용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면 될 거다라는 거고요.

간단하게 끝내겠습니다.

장기적 전망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정책의 중복이 있으면 항상 정책의 사각이 발생할 수밖에 없겠지요, 그러니까 뭔가 효과가 금방 금방 나타나는 것들이라든가 훨씬 더 중요해 보이는 것들에 집중하다 보면 실제로 정책 사각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예를 들면 청년일자리정책도 지금 보면 지나치게 대졸 취업자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고졸 청년의 취업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어떤 정책들이 쉽게 잘 관찰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생기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중복과 사각을 방지하기 위해서 총체적으로 전체 그림을 보면서 청년정책을 부처간에 좀 조율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총체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아까 R&D 예산도 말씀드렸고 청년 관련 연구 결과와 자료의 축적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그런 것들이 축적되고 근거중심형 청년정책이 보다 보편적이 됐으면 좋겠는데 지금은 청년 관련된 어떤 논의들이 지나치게 담론적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근거중심적 청년정책을 위한 자료수집 체계라든가 연구기관이라든가 센터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부 차원에서 좀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체계적·조직적 접근은, 그래서 청년 관련된 정책의 어떤 컨트롤타워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을 고려하되 이게 중앙에서 하향식으로 가는 게 아니라 쌍방향 소통이 가능한 지역맞춤형 정책과 그리고 지역의 특색을 살려서 청년들을 유인할 수 있는, 그래서 결국에는 인구 문제의 어떤 해결에도, 그러니까 인구구조의 어떤 문제도 개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역유인형 청년정책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년들이 정치를 통해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내고 자신들의 어떤 이해를 정책영역에서 과소대표되지 않게 하려면 이들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는 채널이나 조직들에 대한 지원들이 있어야 되고 실제로 정당이나 정부는 그들과 소통채널을 계속 유지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수** 김석호 자문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일자리 또 주거·결혼 문제, 아주 큰 성과가 빨리 나기를 지금 정부도 바라고 있고 정치권도 바라고 국민들도 바라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 청년 현실에 대한 진단과 또 청년정책에 대한 진단 그리고 앞으로 우리 정부의 청년정책의 어떤 방향을 제시해 주셨는데 아주 공감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감사하고요.

다음은 송보희 자문위원님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문위원 **송보희** 안녕하세요? 한국청년정책학회 송보희입니다.

먼저 이 자리에 불러 주셔서 이렇게 발제를 하게 해 주신 점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청년들에게 가장 필요한 주거 문제와 그리고 청년정책의 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정책 전달체계 강화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간 청년들의 어려운 실태는 너무나도 많이 알고 계실 거라 믿고 주로 정책 제언 중심으로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청년주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이유는 청년들이 아직 일자리에 나아가지 못한 상황에서 실제로 현금이라는, 그 주거비용이 드는 부분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굉장히 많은 주거지원 정책이 집행되고 있지만 이 정책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실효성이 적다는 데 있습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수요 대비 공급을 전폭적으로 확대해야만 지금 지원이 절실한 청년들이 해당 정책의 수혜를 적시에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016년 기준으로 국내 전체 주택 수 대비 공공임대주택 수 비중은 6.8%에 그칩니다. 2007년에 비해서는 단 1.7% 증가에 그치고 있고요. 20년 이상 장기간 임대되는 공공임대주택 비중의 경우에도 5.6%에 해당합니다.

OECD 평균 비중은 8%에 해당하고 이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공공임대주택 비중은 너무나도 적은 부분입니다. 이러한 공공임대주택의 전면적 확대를 통해서 수요가 안정이 된다면 나중에는 부동산값 그리고 임대료의 하락효과를 부가적으로 불러일으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어지지만 이 부분에 대한 실질적 검증은 연구가 즉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청년주거안전망에서 가장 첫 번째 정책 제언으로는 공공임대주택의 10% 전면적 확대입니다. 또한 이 전면적 확대는 장기간에 걸친 점진적 확대가 아닌 단기적 확대를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런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재정적 부담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있어서는 다른 해외 나라를 봤을 때 우리나라처럼 중앙정부와 지자체로 집중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비영리조직이나 주택조합 그리고 영리조직과 개인의 비중이 크게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덜란드의 경우에도 민간조직인 주택협회 등이 공적보조금을 받지 않고 순수하게 민간자원으로 운영하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도 공공임대주택의 10% 전면적 공급 확대를 단기간에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자체에 집중되어 있는 이 공급 주체를 민간과 비영리, 사회 쪽으로 많이 퍼트리는데가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지고요.

또한 신규 건설 방식보다는 기존의 미분양 주택을 활용하는 방안으로서 이 10%의 확대를 일으켰으면 좋겠습니다.

주택 및 전세가격 등이 혼인율과 출산율의 중요한 결정요인이라는 점을 시사하는 선행 연구도 존재하는 바 있습니다. 이렇게 청년의 주거 문제에 있어서는 단순히 그 시간에만 존재하는 문제가 아니라 향후 저출산이라는 문제에 있어서도 큰 결정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주거안전망에 대한 정책 제언은 빈집 활용에 대한 거주공유제도를 제안하는 바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금성 주거비 부담은 청년에게는 너무나도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높은 주거비용에 비해서 주거의 질도 너무나도 현저히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특히 청년구직자의 경우에는 길어지는 구직 기간에는 별도의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주거비를 감당하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또 불안감에 싸이는 등 취업준비를 마음 편히 할 수 없다는 점도 심리적인 부분의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일자리 문제에 있어서도 일자리를 창출해 주고 제안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심적·물적 안전망을 설계해 준다는 차원에서 이 주거안전망은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청년 대상 주거 지원의 경우에는요 기존의 빈집과 미분양 주택을 활용하는 방안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전국의 빈집, 2015년 기준은 107만 호에 달하고요, 전체 주택의 6.5%에 해당합니다. 수도권외의 경우에도 굉장히 많은 빈집이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시도별 빈집 증가량을 예측한 결과 2050년에는 전국에 빈집이 302만 호로 전체 주택의 10%가 빈집일 거라고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빈집은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생활환경을 저해시키는 사회적 요인으로도 촉발될 수 있는바 이러한 빈집을 활용해서 공유제도를 통해 청년의 주거안전망을 좀 깔아 준다면 실질적인 재정부담은 지우고 사회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혹은 생활환경을 저해시킬 수 있는 요인을 같이 없애 줄 수 있는 방안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실제로 17년 2월에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상 이런 빈집정비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고 또한 빈집정보시스템 구축이 가능한 바 있습니다. 정부 주도의 빈집 정비 과정에서 빈집 소유자와 청년 간 매칭을 통해서 일정 계약 기간 동안 상호 인센티브가 될 수 있도록 주거지원정책을 설계한다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정부뿐만이 아니라 민간 주도로 해서 빈집 거주 공유사업을 진행할 의사가 있는 청년 소셜벤처나 스타트업 혹은 중소기업 등을 선정해서 빈집정보시스템을 활용해서 사업을 활성화시키는 데 지원해 주는 것도 큰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뒤에 영국 로위 가디언스 스타트업의 경우에도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8만 명에 육박하는 청년 홈리스를 연결하는 위워크(WeWork) 제도를 활용하고 있고요, 이를 통해서 2017년 11월 기준으로 200명이 입주했지만 현재는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정책 전달체계 부분인데요. 사실 청년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정책의 가짓수나 예산은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효능감과 체감도가 없다는 데 있습니다. 그 부분은 현재 실시 중이거나 확대될 청년정책의 실효성과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지원협력체계 구축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특히 청년일 자리를 포함한 청년정책의 경우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각 지역에 있는 교육기관과 지원센터 그리고 수행조직과 위탁기관 등의 역할이 재조정되고 연계되는 지원협력체계를 기반으로 제도 설계가 필수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정부와 국회는 청년정책에 대한 종합목표와 비전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정책과제

와 법제도 개선을 통해서 방향성과 직접적인 솔루션을 제시하는 데 역할을 해야 합니다.

지자체의 경우에는 보다 밀접하게 청년과 맞닿아 있기 때문에 지역 특성과 삶의 패턴에 맞게 맞춤형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데 역할을 해야 합니다. 특히 지역 차원에서는 민간이나 노동조합, 정부가 민관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해서 논의구조를 만들어 상시적으로 합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은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그리고 각 지자체별로 핫라인을 구축해서 청년정책이 개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충돌을 미연에 방지하고 상호 보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정책 대상인 청년들이 정책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데에 있는데요, 이러한 청년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회의체가 구성되고 그 회의체가 보다 공고히 장기적으로 그리고 상시적으로 이루어지는 데 법제도 개선이 실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희가 전국 청년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을 때 청년들의 현재의 역할이 뭐냐라고 했을 때 ‘주체적으로 내 삶을 도전하고 노력하는 자세가 이 시대의 청년이 해야 하는 자세다’라고 대답을 한 바 있습니다. 현재 2018년을 살아가는 청년들은 그 어느 세대보다 주체성이 있고 굉장히 도전하고 싶어 합니다. 나답게 그리고 당당하게 청년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포함한 청년정책의 목표가 집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청년정책이 단순히 청년들이 힘들기 때문에 지원해 주자라는 차원이 아니라 보다 자립하고 도전하며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투자해 주고 국가가 청년들을 케어해 준다는 차원의 목표 방향성이 설계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수 송보희 자문위원님 말씀 감사하고요.

주거안전망에 관해서는 일부 내용이 정부 정책에 포함은 되어 있습니다만 성과가 잘 안 되어서 그러는데 좋은 참고가 될 것 같고요.

지금 말씀은 아까 김석호 자문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당장에 어떤 실적이나 성과를 내려고 조금

히 하지 말고 종합적으로, 장기적인 전망과 안목으로 제대로 체계적으로 추진했으면 좋겠다라는 같은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말씀 감사하고요.

다음은 안현중 자문위원님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문위원 안현중 반갑습니다.

저는 정책자문기구인 청년위원회에서 소통과 대외협력을 담당했었던 안현중 전 팀장이라고 합니다.

앞서 청년의 미래와 현실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여러 특위 위원님들 앞에 발언 기회를 얻게 되어 감사하다는 인사를 먼저 전하고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정책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비단 청년정책뿐만 아니라 다른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항상 국민들이 또 정책 대상들이 정책들을 얼마나 인지하고 있는지에 대한 고민들과 내용들을 점검하고자 하는 것들이 당연한 상황일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청년들의 정책 인지에 대한 조사는 매년 이루어져 왔었고 최근에도 고용부에서 작년 12월 달에 청년고용정책 인지도 조사를 실시한 바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한 1600여 명 정도의 대학생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조사가 이루어졌었는데 한 50% 정도의 정책 인지도가 있다라고 발표가 된 바가 있었습니다.

수치만 놓고 본다면 높은 수준이 아닌가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청년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일자리 정책에 대한 부분조차도 절반 정도의 인지도를 갖고 있다는 부분은 청년들이 정책들을 얼마나 많이 인지하는지에 대해서 방증하는 또 다른 모습일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청년이 과연 청년정책들을 모르는 것일까?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대학교 학기가 시작될 때마다 검색어 상위 랭킹에 달리는 검색어도 있습니다. 바로 국가장학금인데요. 이런 부분들은 청년들이 몰라서 찾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찾아서 이것들을 자신의 혜택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정보들을 찾는 것입니다. 아울러 주거에 대한 부분도,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부분들도 자리와 위치에 대비했을 때 효율적인 장소이기 때문에 그곳을 잡기 위해서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로또에 당첨되는 것과 같은 심정으로 도전하는 일들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청년정책에 대한 부분들을 앞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많은 정책들이 있고 지난해에 발간된 일자리 정책 위주의 ‘한 권으로 통하는 청년지원정책 프로그램’을 보더라도 중앙정부와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274개 정도의 정책들 목록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주거나 부채나 다른 활동 지원에 대한 지자체의 세밀한 정책들도 더한다면 숫자는 그보다 더 많아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청년들이 이것에 대한 인지가 부족한가 그것에 대한 내용들을 고민해 본다면,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청년들이 정보를 검색하는 능력이 떨어지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정보들을 찾기 위해 그 누구보다도 애쓰고 있고 어느 지역에 놀러간다든지 여행 가거나 또 맛집을 찾는다거나 할 때 그런 정보들은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알아서 잘 찾아서 찾아갑니다. 그리고 모르는 것이 있다면 페이스북과 같은 SNS를 통해서라도 알아내서 그 부분들을 다 찾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부분들은 관심을 갖지 않는가?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정책들이 나와 맞닿아 있다는 면들을 많이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관심을 가지고서 정책을 신청하거나 그것의 수혜자가 되고자 했을 때의 경우를 뒤집어 본다면 또 그런 접근이 어려운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쓰여져 있는 언어들이나 소개하고 있는 내용들, 구성하는 방식들이 좀 낯선 경우들도 많고 신청 영역들을 볼 때도 내가 해당되는 게 없는 것인가라고 의구심을 가질 때가 많은 것 또한 사실입니다.

실제로 한 광역시도에서 청년에게 수당과 같은 제도의 모집을 진행한 적이 있었는데, 그 절차나 내용들이 많이 힘들어서 신청이 저조한 결과를 가져온 경우가 있었고 이런 절차들을 간소화한 이후에나 겨우겨우 정원을 채운 적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정부는 노력들을 안 해 왔는가? 해 왔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도 위원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포털이나 정책 정보에 대한 부분들을 전달하기 위해서 애를 썼었지만 구조들이나 상황들이, 현장에서 그다지 잘 접목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들이 분명히 좀 있었습니다. 정책에 대한 검색들을 많이 하게 하기 위해서 청년포털과 같은 포털 제도를 운영해 봤었지만 검색의 내용들

자체가 각 부처와 기관에서 생산되는 것들을 보여 주다 보니 그러한 내용들 자체가 청년들에게 정보로서 최적화되어 있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색되는 결과 또한 청년들에게 크게 호응을 얻지 못했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또 호응 받는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지난 16년도 4월에 서비스를 시작한 청년정책 사용설명서와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문체부의 국민소통실을 중심으로 전 부처에서 연합으로 이것들의 채널을 운영했었는데 지금 현재 3월 기준으로 봤을 때는 페이스북 ‘좋아요’ 숫자도 10만 8000, 팔로어도 11만 명, 블로그 누적 방문자 수도 1428만 명, 구독자 2만 1000명, 게시물도 1600건에 육박하고 있고 소위 정부에서 주도하고 있는 SNS 채널 중에서는 잘나가는 채널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는 내용에 있어서 청년들에게 최적화되어 있는 콘텐츠 베이스를 가지고 있고 소개하는 내용들도 청년들이 공감 가는 내용들로 꾸려져 있다 보니 그러한 결과들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청년지원정책들이 보다 현장에서 잘 활용되고 정책 친밀도를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협의체에 대한 이야기들을 강조해 주셨는데 저도 덧붙여 강조를 드리고자 합니다.

청년기본법에 대한 논의들은 국회에서 아직 미진한 가운데에 있고 청년기본조례는 지자체에서 보다 활성화게 기초단체들까지도 설정되어서 그것을 근거로 많은 여러 청년정책들이 현장에서 구현되고 있습니다. 취·창업이나 대학 학자금, 주거에 대한 부분들은 중앙정부가 주도하고 있지만 오히려 청년들이 선호하고 있는 수당 문제 또 활동 지원 프로그램들은 지자체에서 그 정책들을 선도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그러므로 청년정책들이 보다 현장에서 호응도 높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 확대되는 영향력들을 상호 간에 주고받으려면 중앙정부와 기관, 그다음에 지자체까지 아우를 수 있는 전체적인 협의체의 구성이 반드시 세워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일들을 통해서 홍보에 대한 부분들 또 정책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들이 청년들에게 최적화된 형태로 설계될 수 있는 여지들이 많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정보 전달에 대한 부분을 말씀



드릴 때 청년정책을 좀 더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활동될 수 있는 정보센터의 운영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는 고용부에서 청년워크넷 또 앞서 말씀드린 소통실의 청년정책 사용설명서의 두 가지 채널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청년워크넷 채널 같은 경우에는 고용부에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일자리 정책 위주로 운영될 수밖에 없는 한계들이 좀 있고요. 기본적으로 청년정책 사용설명서는 SNS 미디어 채널적 역할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청년들이 정책을 신청하거나 하는 부분까지 연결되는 구조를 갖기에는 채널적인 한계를 갖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청년들에게 이런 부분들을 더 적극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복지부에서 복지정책들을 전국적으로 전달하는 사례들을 따라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생애주기마다 또 사회 진출마다 적용될 수 있을 만한 정책의 키워드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청년들에게 직접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시기적으로 관련된 정보들을 푸시 형태로든 정보 전달을 적극적으로 진행한다면 누릴 수 있는 청년정책을 놓치는 상황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다음에 정보 제공의 방식에 있어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향을 선택해서 이런 부분들이 청년에게 최적화된 정보의 형태로 큐레이팅되고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인터페이스들도 가져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덧붙여 말씀을 드린다면 청년정책들의 소개를 꼭 정부 채널에서만 해야 되는 법은 아닙니다. 일자리 포털이나 아르바이트 포털은 청년들이 늘 찾아가고 매일매일 수회도 방문하는 곳들입니다. 오히려 그러한 지점들 속에 청년정책을 소개하는 내용들을 신는다면 더 손쉽게 또 가까이 정책들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끝으로 청년정책의 활동 저변을 확대하기 위한 마지막 제언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청년들을 만나면서 가장 많이 요구받는 것들이 공간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청년들이 이야기를 같이 나눌 수 있는 공간 또 정책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하지만 정부나 시에서 이 공간들을 마련하기 위해

서는 예산적인 또 상황적인 한계에 많이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지금 현재도 민간에서는 자기들이 개발하고 있는 공간에 청년 공간을 세워서 제공하는 사례들이 종종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좀 더 활성화되어서 청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거점 공간이 좋은 자리에 또 활동하고 접근하기 좋은 장소에 세워질 수 있는 민관 협력들이 이어진다면 청년정책들도 좀 더 세밀화되고 청년들이 원하는 정책들이 많이 만들어질 수 있고 제공될 수 있는 계기들이 있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수** 안현종 자문위원님 여러 가지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정말 청년들을 위한 정책에 청년이 주체가 되지 못하고 있다, 우리한테 따끔한 지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부 각 분야에서 어떤 정책을 형성하거나 선택할 때 늘 매번 수요자 중심으로 하자…… 청년정책은 청년을 위한 또 청년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그게 계속 강조되고 지적하고 고치겠다고 하는데 새로운 정책을 만들면 또 그렇게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정말 절실하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인식하고 앞으로 정부의 정책이나 여러 가지 일들이 정말 수요자, 그 정책 서비스를 제공받을 사람, 제공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을 중심으로 확실하게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다음은 엄창환 자문위원님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문위원 **엄창환** 안녕하세요.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엄창환입니다.

저는 오늘 지방정부 청년정책 흐름을 기준으로 중앙정부 청년정책의 필요와 정부와 국회에 꼭 챙기셨으면 하는 것들을 이야기드리고자 토론문을 전달드렸는데요, 제가 사실 원고 하나를 좀 다르게 써 보았습니다.

실제 와서 보니까 이미 앞서서 자문위원분들이 얘기해 주신 내용도 되게 많고 사실 19대 국회 때보다 청년기본법 논의가 진행되어 왔던 것 그리고 청년미래특별위원회 회의록에서도 관련 내용을 계속 확인할 수 있었던 것들이 있어서 오늘 토론문 중에 초점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 이야기를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토론문 앞단에 있는 내용은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일자리·주거·부채·문화·생활·권익향상 등 청년정책은 종합적으로 재구성돼야 된다. 그리고 뒤에도 살짝 언급을 하겠는데요, 지역 격차를 포함하여 연령 격차, 소득 격차, 학력 격차, 성별 격차 등 청년세대 내 발생하고 있는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정책에서 발생하는 지역 격차와 불균형 관련된 내용입니다.

현재 서울에서 살고 있는 청년들은 월 50만 원씩 6개월 지급되는 청년수당을 받아서 활용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주에 살고 있는 청년들은 보건소에서 무료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고요. 하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유사한 청년정책을 지원받고 싶지만 해당 정책이 존재하지 않거나 낮은 소득수준 기준으로 인해서 낙인효과를 걱정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주에 있는 청년들은 작년부터 전국에서 유일하게 청년 갭이어(gap year)를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올해는 몇 지역에서 추가로 청년 갭이어를 시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겠지만 지역마다 청년정책은 상이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물론 지역별로 상황을 고려하며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보장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재 지방정부별 청년정책의 흐름이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지점이 있으며 특정 문제는 지역경계를 넘어 보편성을 띠기 때문에 오히려 지역 격차로 인한 청년정책 소외지역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대로라면 향후 청년정책으로 인한 제도의 불균형과 지역 격차가 더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지점이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형성기에 있는 청년정책은 제도개선과 안착 과정에서 청년현장의 상황을 반영하며 변화에 유연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청년활동의 규모는 지역의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편차가 큼니다. 이는 청년정책 외에 다른 분야에서 마찬가지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역마다 격차가 분명한 한국 사회에서 인적·물적 기반이 부족할수록 이러한 기반 구축 지원을 우선으로 진행해야 되지만 지방정부의 이

러한 관점은 찾아보기 어렵고 예산 조달의 한계 또한 존재합니다.

결국 이러한 문제들로 악순환이 반복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상황이 바뀌지 않고서는 지역 청년은 지역 청년정책에서조차 설 자리를 찾을 수 없을 것이며 우리는 청년정책에서도 지역 격차를 실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정부가 청년정책을 종합하는 모양새를 갖추고는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는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방정부의 현실로 인해 중앙정부의 예산 의존을 피할 길이 없고 연관되어 세부 정책과제가 일자리정책에 여전히 편중되어 나타나는 상황이 있습니다. 48페이지의 표5와 4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년정책의 예산 비중은 전체 예산 중 1% 내외로 예산규모가 절대적으로 작습니다. 게다가 중앙정부의 예산은 일자리에 대부분 투입될 수밖에 없게 되어 있고요, 전반적으로 일자리 분야의 예산이 압도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종합정책 도입 취지가 무색하게 예산분포의 불균형이 심각한 청년정책의 열악한 현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청년정책이 일자리 분야를 넘어 보편화되어야 지방정부에서도 한계를 넘어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덧붙여 현재 상황을 좀 이야기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2월 26일 인천광역시에서 청년기본조례 제정한 것을 마지막으로 17개 광역지방정부에서 모두 청년기본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청년정책 범위 확대에 대해서는 이견이 거의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체로 합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의 종합적인 청년정책의 수립은 현실화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재의 상황입니다.

또 19대 국회에도, 20대 국회에도 청년기본법이 매년 발의되지만 여야 합의안에도 들지 못하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이 와중에 청년의 현실은 계속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가 긍정적인 방향이 아니라는 것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을 감안했을 때 중앙정부의 청년정책은 청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파격성을 떨 것인지 아니면 청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현실성을 가질 것인지 이 지점에서 선택을 하고 힘을 모아

실질적인 실행력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 이것이 제가 오늘 이야기드리고 싶은 내용의 요점입니다.

청년기본법 제정은 사실 청년정책의 범위를 확대하자는 가장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사회적 동의가 쉬운 지점이 있으니 기본법 제정에서 출발하자는 판단에서 그간에 주장해 온 맥락이 있습니다. 즉 기본법 제정 등의 제도 정비가 당장 청년의 현실을 반영시키는 해법이 되기는 어렵겠지만 점진적 해결이라는 것을 전제로 주장을 해왔었는데 생각보다 기본법 제정 추진이 더딘 것을 보고 답답한 마음이 좀 크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다들 중요하다고 말하고 별다른 의견은 없어 보이는데 왜 기본법 제정이 안 되는 것인지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기도 합니다.

다른 측면으로 파격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면 불평등 해소를 위한 과감한 사회진입 정책을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로 청년기본소득, 사회출발자산, 사회상속제 이런 것들이 대안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청년에게만 이러한 정책수단을 쓰는 것에 대한 사회적 반감이 클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약 2년 전 말도 안 되는 정책이라고 이야기되었던 청년수당이 전국화되고 중앙정부 정책으로 발표되어 온 과정들을 보면 저는 불가능한 이야기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문제의 심각성을 반추해 보면 이런 정책수단을 고민해 볼 필요가 반드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야말로 국회나 정부가 고민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떤 출발이라도 좋다고 봅니다. 종합적인 청년정책 도입의 출발점을 갖고 점진적으로 진전시켜도 좋고 다소 사회적 논란을 감수하더라도 파격적인 정책수단을 도입하는 것도 방법일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가 어디서 힘을 모을 것인지, 누가 의지를 낼 것인지 이런 것들이 문제로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출발이라도 출발하자는 합의와 실천의지를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청년미래특위가 그 역할 혹은 책임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시간을 조금 더 써서 이야기를..... 여기서 마무리를 하려고 했는데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종합정책 컨트롤타워와 거버넌스 관련된 내용입니다. 앞서 이야기해 주신 내용들도 있는데 저

도 좀 덧붙이고 싶어서요.

컨트롤타워 관련해서 꼭 중요한 지점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지방정부 청년정책의 역사에서 법 제정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기반이 되겠지요. 그만큼 청년기본법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방정부의 청년정책을 존중하고 자율권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부처 및 정부 간 협의 조정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방식이어야 하고요.

둘째는 지역 격차를 줄이는 방식으로 청년종합정책을 견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두 가지를 고려해서 컨트롤타워를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청년정책 위상을 제고하고 청년의 참여, 즉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한 중앙정부의 노력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중앙정부는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를 폐지하고 일자리위원회로 일원화하는 등 그동안에 축적해 온 청년정책의 경우와는 관계없는 모습으로 흘러 왔습니다. 물론 박근혜정부하의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가 조직관리에 치중했다는 내외의 평가가 있으며, 그 과정에서 기존 위원회의 존재감이 미미했고 청년 현장의 의견이 모아지지 않았던, 부재했다는 점의 문제는 모두 공감합니다. 하지만 폐지의 방식이 아니라 개선했어야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심의의결기구는 대표성과 전문성, 책임성으로 인해 경직성을 띠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청년이 조직되지 않은 집단이라는 것을 고려했을 때 민간의 의견을 더 원활하게 듣는 창구로서, 청년정책이 수립·시행되는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역할로서 지방정부 참여기구의 위상을 중앙정부에서 구조화할 수 있는 방안을 다시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수** 엄창환 자문위원님 여러 가지 말씀 감사합니다.

주로 청년정책에 관한 중앙과 지방 간의 차이, 지역 간 차이, 보편적 추진과 선택적 추진에 따른 차이, 여러 가지 차이를 지적하면서 문제가 차이가 더 커지고 있다, 늘어나고 있다 하는 점을 지적하시고 청년정책의 컨트롤타워, 거버넌스, 또 그중의 하나가 청년기본법 제정이다, 공감하는 말씀 많이 주셨습니다.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황인국 자문위원님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문위원 황인국 반갑습니다. 한국청소년재단 황인국입니다.

앞의 한국청년정책 송보희 학회장님께서 말씀하신 청년 주거안전망에 있어서 큰 틀을 얘기하셨고 저는 그 내에서 청년 1인가구의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들이 언론이나 연예방송 등을 통해서 보게 되면 1인가구에 있어서는 굉장히 멋지고 여유롭고 멋있는 이런 것들로 표현들이 됩니다. 1코노미, 옐로(YOLO)족, 싱글쇼퍼. 대체로 이러한 부분들의 1인가구들 내용을 보게 되면 시장의 트렌드 변화에만 관심이 맞춰진 분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아까 제가 봤더니 포인터기가 굉장히 부실해서 제가 발언하기 전에 이것을 하나 고쳐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잘 안 넘어가는 것은 제 잘못이 아니라 포인터기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스타급 연예인들의 라이프 스타일들을 보게 되더라도 그렇지만 1인가구에 있어서 일반 가구 대비로 1인가구가 현재 27.9%입니다, 전체 일반가구의 27.9%.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을 보시게 되면 대체로 우리들이 피상적으로 알고 있는 부분들과 다르게 비현실적인 1인가구들의 삶이 빈곤층 1인가구에 대한 상대적인 박탈감을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현재 2018년 2월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남성 15세에서 34세까지, 15세에서 34세 미만까지의 기준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근거한 내용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이렇게 볼 때 남성 1인가구의 수가 여성보다 19만 가구가 더 많은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원고 보고 말씀드릴게요. 잘 안 되네요.

○위원장 이명수 원고에 대한 책자는 있습니다.

○자문위원 황인국 예, 책자의 글자가 작아서 그랬는데……

○박순자 위원 이것 당장 고치도록 하세요.

○자문위원 황인국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방금 전 말씀드린 대로 일반가구 전체 속에서 다시 또 보게 되면 1인 청년가구들의 가구 비율은 1인가구 중에서 또 28%입니다. 실제로 전체 일반가구에서 1인가구가 27.9%, 그 속에서 34세 미만의 청년 1인가구들이 또 28%. 보시는 분들의 입장

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렇게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체로들 인식하고 계시겠지만 청년 1인가구들의 건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인가구에 비해서 아침식사 결식률이 어찌 보면 당연하게도 청년 1인가구가 훨씬 높습니다. 주된 식사 메뉴는 보시는 바와 같고 편의점 이용률 압도적입니다. 1인가구와 다인가구에 있어서 흡연율, 과음 비율, 비정상적인 수면 이러한 부분들이 청년 1인가구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차이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청년 1인가구의 주거 실태입니다.

2015년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년층 가구의 주택 점유는 월세가 62.9%, 전세는 21%로 임차가구 비중이 약 84%, 특히 청년층 가구 중에 20~29세 청년의 65% 등이 월세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지역에 따라서 공간에 따라서 상이한 이러한 임차료들을 내고 있습니다. 개인들의 소득기준에 따라서는 굉장히 높은 비중이 될 수도 있음을 의미합니다.

청년층 가구는 주로 40㎡ 이하 단독·다세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데요. 20~29세 이하 가구주의 69%가 40㎡ 이하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고 그 중의 60% 이상이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는데 이는 원룸 등에서 거주하고 있는 가구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러한 문제를, 청년 문제에 있어서 주거안전망 문제를 중요하게 제안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청년 1인가구들의 유형과 문제점 보시게 되면, 청년시절에 한번쯤 독립하고 그러한 독립된 생활이 개인의 성장에 일부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자립적·자생적인 의지를 높이기도 하고.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과 다르게 어찌할 수 없이 청년 1인가구를 선택해야 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고용불안, 저소득의 문제를 안고 있고 이 때문에 아시다시피 결혼 의사를 포기하거나 가족에 대한 성향도 부정적이 될 수밖에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청년 1인가구들의 소득분포를 보게 되면 1인가구 중의 30대 미만 소득은 평균 177만 원으로 다인가구에 비해서 22만 원 정도 월소득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특히 1인가구 중 저소득층 비율은 52%이고 중소득과 고소득층은 13, 3.3에 불과합니다.

내용들은 아래 내용들 보시는 바와 같고, 그래서 시간관계상 말씀을 좀 드리면 청년 1인가구의 법률, 시행령, 시행기준에 있어서의 개선사항을 요청드립니다.

일단은 먼저 1인가구가 70% 이상인 다가구·다세대 주택에 대한 개념과 용어가 특정되어질 필요가 있다라고 제안드립니다. 1인가구가 많아도, 전체 일반가구의 27%에 달해도 도시형생활주택, 다세대주택이라는 용어에 묻혀 있어서 1인가구에 대한 문제들이 특정되고 있지 않고 이에 따른 문제들이 있다고 보입니다.

또 부동산의 기본 임차 면적에 있어서 하한선의 정의가 필요하다, 1인 가구원에 대한. 현재는 일반가구 4인가구 위주로만 하한선이 특정되어 있습니다.

다세대주택 건축 시에 있어서 1인 가구원의 휴게 공간 및 커뮤니티 공간의 배치들이 필요하도록 관계 법령이 개정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아시다시피 1인 가구원들이 떠오르는 상상 그대로 그 좁은 공간에서 폐쇄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현재적인 구조가 있습니다.

고시원, 고시텔, 다들 아시다시피 유사 1인가구 주택 내의 주거복지에 대한 문제들이 법률적으로 명기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임대차 계약 시에 건물주는 1인 가구원에게 부동산의 치안·안전서비스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고 이를 확인받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1인가구 과밀 주택의 경우는 반드시 경호, 보안업체를 이용하게 하고 건물주, 임대인이 이를 임차인에게 관리비 사용 내역과 함께 통지해야 된다는 점들을 세밀하게 다뤘으면 좋겠습니다.

관련법에 있어서 1인가구에 대한 개념과 용어를 삽입하고 건축법에 있어서 1인가구 주택에 대한 개별 임차 공간의 단위면적 기준 치안벨, 완강기, 소화기 등의 치안·안전설비에 대한 의무화를 넣을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 내용은 작년도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김영진 의원과 제가 공동대표로 있는 생활정책연구원에서 정기국회를 앞두고 함께 만든 1인가구에 대한 자료집 안에 대체로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 중에서 15세 이상 34세까지의 청년 부분을 발췌해서 추가적인 내용과 함께 말씀드렸다는 부분을 첨언드리고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수 황인국 자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청년 1인가구 중심으로 청년에 관한 문제의 진단과 또 입법적인 해결 대책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좋은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거듭 자문위원님들의 좋은 말씀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위원님들의 질의 차례입니다.

그동안 해 온 것처럼 오늘 질의는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되 우선 첫 질의를 마치고 필요한 경우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7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답변하실 발제자나 관계자를 지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전 협의에 따라서 자유한국당의 존경하는 박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 경기 안산 단원을 출신 박순자 위원입니다.

우선 자문위원 여러분들의 발제에 공감하면서 잘 들었습니다.

특히 송보희 한국청년정책학회 회장님의 청년 정책에 대한 안전망에 대해서 깊이 공감을 가졌고요. 또 엄창환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대표님 말씀 또 한국청소년재단 황인국 이사장님 발제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바가 큼니다.

아까 특히 엄창환 청년정책네트워크 대표 자문위원님께서 청년기본법에 대해서 굉장히 답답한 말씀을 주셨는데 청년기본법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싶다고 하셨지요, 답답하시다고?

그것은 2016년도에 20대 국회가 구성되자마자 바로 제 옆에 있는 신보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시고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이 공동발의를 하시어서 지금 그 청년기본법이 소위에 올라가서 계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첨언해서 저는 또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대표발의를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모든 여섯 분 자문위원님들의 발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공감하는 부분은 청년정책의 전달체계가 보완이 미비하다는 것에는 3선 국회의원으로서는 아직도 이것을 제대로 우리나라 청년들에게 못 맞추고 있다는 데 대해서 본인도 책임을

느끼고 더 청년정책 지원 입법에 대해서 노력하고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라도 더 챙기고 체크해야 되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주거에 대한 발제에 제가 공감하는 부분은 현재 청년정책 중에서 가장 아쉬운 것이 주거 안정 그리고 여러 가지 금융정책, 생활 일 것입니다.

그래서 주거 안정에 있어서 청년 입주 요건을 완화해야 된다는 생각을 평소에 하고요. 또 청년 단체들과 토론회를 해 보면 가장 많은 어려움을 하소연하셨고요.

그다음에 생활안정자금 지원에 있어서 정부정책이 실효성을 갖추지 못했다 이런 지적을 많이 받았고요. 또 거기에 대해서 단기적으로 보여 주기 식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대책을 수립해서 무엇보다도 주거 안정에 있어서 청년 입주에 대해서 요건을 완화하고 전월세 대출이자 부분에 있어서 완화를 해야 되겠다, 지금은 거의 평균이자율 3.2% 지원하는 방식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데 이것을 확실하게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중소기업 취업 청년 일정 부분의 소득세 감면 이런 실질적인 세제지원책을 시행하는 법안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겠다는 데 공감하시지요, 엄창환 자문위원님?

○자문위원 엄창환 예.

○박순자 위원 그다음에 송보희 자문위원님도 공감하시지요?

○자문위원 송보희 예.

○박순자 위원 정부 부처에서 지금 여기 동석하고 계시는 국무조정실의 김달원 과장님 어디 계세요?

○국무조정실사회정책총괄과장 김달원 예.

○박순자 위원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지금 현재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의 실무 책임자가 누구니까?

○국무조정실사회정책총괄과장 김달원 대통령 일자리위원회는 청와대 일자리수석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순자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실무 책임자가 이용섭 부위원장 아닙니까?

○국무조정실사회정책총괄과장 김달원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순자 위원 그런데 이분이 광주광역시출마 선언을 하셨지요?

○국무조정실사회정책총괄과장 김달원 예, 그렇

게 알고 있습니다.

○박순자 위원 아니, 청년일 자리를 만들고 청년 정책을 만들고 대통령 직속실의 일자리 실무적인 책임자 부위원장이시면서 청년정책을 우선 만들어야지…… 실무적인 일 할 사람이 없고 컨트롤 타위가 없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각 부처만 여기 배석하고 계시는데, 특히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교통부 계시는데 실질적인 각 부처 말고 이것을 총괄, 청년정책을 컨트롤하는 타위가 어디입니까?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지요?

○국무조정실사회정책총괄과장 김달원 일자리위원회는 청년일 자리를 챙기고……

○박순자 위원 거기에 청년정책도 들어가는 거지요, 가장 중요하게.

○국무조정실사회정책총괄과장 김달원 일 자리를 포괄해서 주거, 문화, 참여 이런 것들은……

○박순자 위원 그러니까 총괄하는 거지요.

○국무조정실사회정책총괄과장 김달원 총괄은 저희 총리실에서 중심이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박순자 위원 총리실에서 하고 있어요? 그러면 과장님 소관입니까?

○국무조정실사회정책총괄과장 김달원 예, 그렇습니다.

○박순자 위원 그러면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청년실업자 수가 몇입니까?

○국무조정실사회정책총괄과장 김달원 청년실업률은 9.9%, 약 43만 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순자 위원 제가 통계를 잡기로는 102만 명이라고 실업자 수를 통계하고 있는데……

○국무조정실사회정책총괄과장 김달원 그것은 청년 체감실업률 22.7%를……

○박순자 위원 26.3%입니다, 체감률은.

과장님, 수치를 제대로 좀 아십시오.

그렇게 하고 올해 청년정책 예산이 얼마 됐습니까, 본예산에?

○국무조정실사회정책총괄과장 김달원 저는 청년일자리 전체를 맡고 있지는 않고요, 그것은 기재부와 일자리수석실이 맡고 있어서……

○박순자 위원 아니, 조금 아까 일자리 컨트롤 타위는 기획재정부가 아니라 국무조정실에서 하고 있다면서요?

○국무조정실사회정책총괄과장 김달원 청년정책 중에서 일자리하고 저출산 부분은 청와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박순자 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과장님, 아까 제가 질의할 때 정부 총괄 컨트롤타워가 어디냐고 물었지 않습니까? 나오신 다섯 개 부처 말고 청년정책을 컨트롤하는 타워가 어디냐고요?

○국무조정실사회정책총괄과장 김달원 전체는 총리실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순자 위원 총리실이면 과장님 소관 아닙니까?

○국무조정실사회정책총괄과장 김달원 그렇습니다.

○박순자 위원 그런데 어떻게 청년정책 본예산에 대해서 모릅니까? 얼마입니까, 청년정책 예산이?

○국무조정실사회정책총괄과장 김달원 구체적인 수치는 지금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박순자 위원 지금 청년실업자 체감 수가 102만 명이고 그다음에 체감 청년실업률이 21.6%나 되는데, 청년이 얼마나 민감한 정책이고 우리 대한민국의 어젠다고 미래의 걱정거리인데 예산 정도는 알고 계셔야지요.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국무조정실사회정책총괄과장 김달원 죄송합니다.

○박순자 위원 탓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자문위원들 여섯 분 말씀 들어 보세요. 부끄러워서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정부나 정치인들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정부는 더하고요.

청년일자리 컨트롤하는 대통령직속의 일자리실무 부위원장이 자신의 일자리는 찾아 나가면서 청년일자리정책에 대해서는 지금 못 챙기는 거 아닙니까? 총괄 컨트롤타워도 없고, 제대로 수치도 모르고 예산도 모르고 파악을 못하고 있고.

앞으로 이 문제는 제대로 업무 조율이 잘 되도록 국무조정실에서 여기 나와 계신, 배석하신 부처 담당분들하고 연구를 하십시오. 그래서 이권청년특위 다음에 열릴 때 거기에 대한 대안, 대책을 보고해 주세요.

○국무조정실사회정책총괄과장 김달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더 할 거는 청년들의 여러 가지 주거라든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사회안전망이라든가 금융정책은……

시간이 다 됐지요?

○위원장 이명수 예, 마무리하십시오.

○박순자 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더 신경을 써야겠다는 자문위원분들의 오늘 발제에 대해서 공감하면서 앞으로 많은 관심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수 박순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의 권철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철승 위원 경기 화성병 출신의 권철승입니다.

지난 3월 15일 날 정부에서 일자리대책 보고대회를 열면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질문은 김석호 교수님한테 드리겠습니다.

대책을 발표한 건 알고 계실 테고요. 발표가 난 이후에 3월 19일 날 여론조사를 했는데 찬성 응답이 상당히 높게 나왔고 특히 20대 연령층에서는 70%가 넘는 아주 큰 찬성 조사가 나왔습니다. 물론 답변자들이 정책의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하지는 않았겠지요. 그다음에 또 향후에 추진 과정이라든가 전달체계가 작동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평가가 나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시급한 현안 과제이기 때문에 많은 예산을 지출하는 것에 대해서 아마 국민적으로 동의를 하는 분위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10년간 보면 청년일자리 대책이 스물한 번 있었습니다. 스물한 차례의 청년일자리 대책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거나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청년일자리 대책이 마련되었다고는 보기 어렵다, 이게 현실적인 진단인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는 특단의 대책이라고 명명을 해서 대국민 발표를 했는데요, 교수님이 보시기에 장점과 단점이 있을 텐데 검토하신 바가 있으면 이 자리에서 장단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문위원 김석호 정책에 대한 청년들의 평가가 높게 나오는 거는 사실 각 부처에서 일자리와 관련된 보고를 대통령께 드렸고 그때 학자들이나 정책 전문가들이 다 드렸었고 그런 어떤 자료들을 바탕으로 일자리 관련 대책이 나왔는데 아까

말씀드린 큰 틀에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시간이 없어 가지고 세세한 것을 말씀을 못 드렸었는데 일단 저도 일자리와 주거 문제에 집중하는 거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일자리와 주거 문제에 집중하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청년정책이 어떤 사회적 재생산과 관련되어 있다면 결국에는 이게 중장기적 전망을 가지고 접근하는 게 맞는데 일단 정책이라는 게 그리고 더군다나 특단의 대책이라는 게 그 성격상 그리고 국민들뿐만 아니라 정치권에서도 어떤 단기적인 효과를 보기를 원하잖아요, 실제로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고요.

○권철승 위원 두 개 다 있지요.

○자문위원 김석호 그렇지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집중되는 측면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 단기적 대책, 중장기적 대책을 구분해서 로드맵을 그려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권철승 위원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리면 이게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된다, 거버넌스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동시에 지역별 특성을 살려야 된다고 하는 어떻게 보면 약간 이율배반적인 주장들이 동시에 상존하고 있거든요.

○자문위원 김석호 그렇지요.

○권철승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보면 이렇게 보입니다. 중앙정부에서 청년대책을 세우면 전국에 일괄적으로 내려가니까 지역적 특성을 못 살리게 되지요. 그런데 지역적 특성을 살리는 재정 투입을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지방정부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방재정이 허용되는 정부만 가능한 거지요, 그런 경우에.

그래서 그런 불평등의 문제와 컨트롤의 문제가 동시에 약간 모순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보통교부세 주는 것처럼 특별한 명칭을 주지 않는 청년대책 자금들을 내려 보내는 것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교수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자문위원 김석호 특별한 어떤 명칭을 주지 않는 자금이라는 게 어떤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를 들면……

○권철승 위원 그러니까 사용처를 지정하지 않는……

○자문위원 김석호 그러니까 어떤 지역에서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예산들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권철승 위원 그렇습니다. 물론 수요조사나 이

런 것들은 해야 되겠지요.

○자문위원 김석호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는 모르겠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리려다가 말씀을 안 드린 내용이랑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지금 정부가 일자리대책을 많이 내놓으면서 실제로 일자리에 집중하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어떤 이율배반이라는 게 저도 거버넌스 차원에서 이해는 가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나라의 어떤 상향식·하향식 정책 체계가, 정부에서 만들면 내려 보내잖아요. 그런데 이게 제대로 실행이 되고 그 실행의 결과들이 다시 중앙으로 보고가 되고 선순환이 일어나려면 그 지역에서 어떤 플랫폼들이 갖춰져야 되는 문제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만 해결이 되고…… 그러니까 결국 그게 어떤 청년정책 거버넌스인데……

○권철승 위원 그러면 제가 어떤 지역 특성에 맞는 그런 플랫폼이든 정책이든 이런 걸 형성하기 위해서 그 부분에는 자율적인 예산들이 마련되는 게 맞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자문위원 김석호 예, 저는 한번 시도해 볼 만한 사항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하나만 말씀드리면……

○권철승 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좀 짧아서……

○자문위원 김석호 일자리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청년들한테 시간을 벌여 주는 정책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권철승 위원 알겠습니다.

○자문위원 김석호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게 아니라 그들이 일자리를 찾을 수 있게 시간을 벌여 주는 것……

○권철승 위원 그렇습니다. 그런 지원 정책들이 이번 대책에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문위원 김석호 그렇지요. 알고 있습니다.

○권철승 위원 김가람 자문위원께 질문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클로 지적도 해 놓으셨는데요, 이번 대책에 보면 34세 이하 청년에 대해서 전월세 보증금을 3500만 원까지 1.2% 저리로 대출한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교통비 지원도 매월, 물론 열악한 산업단지에 근무하는 청년들에 대한 지원입니다.

이런 것들은 보면 단순한 지원이 아니라 표적



을 삼아서 필요한 지원을 하는 그런 정책으로 보이는데 이런 방식의 지원 내용에 대해서 김가람 자문위원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문위원 김가람 먼저 제가 발제한 내용의 주된 내용은 결국에는 중소기업에 대해 청년들이 관심을 갖고 중소기업에 취업을 했을 경우에 거기에 따라오는 나름대로의 세제 혜택 같은 것들을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지금도 시행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 우리 중소기업이나 중소기업에 취업을 했을 때 그런 부분들 또한 좀 확대해서 혜택을 줄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권철승 위원 그런 게 이렇게 되면 약간 상위의 개념의 정책 이야기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친재벌정책을 쓴다든가 하면 점점 더 재벌기업들이 좋은 일자리가 되고 그렇게 되면 거기에 더 몰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중소기업 프렌들리 정책에 대해서 청년층들이 지원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지하는 그런 정치적인 운동도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문위원 김가람 많이 관심 갖도록 하겠습니다.

○권철승 위원 추가로 하실 말씀 있으시면 지금 하십시오.

○자문위원 김가람 아닙니다. 많은 관심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수 권철승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는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의 김병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관 위원 자문위원님들 다시 한번 시간 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일단 여섯 분 말씀 주셨고 지난번에도 다른 자문위원님들 말씀 주신 내용들, 저희가 아마 4월부터 7개 청년기본법 본격적으로 심의·논의를 시작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자문위원님들이 말씀 주신 내용들 충실하게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엄창환 위원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도 문재인 정부 들어선 다음에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가 없어진 것에 대해서 많이 가슴 아픈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 청와대, 정부와 여러 가지 소통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느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청년정책의 총괄 부처가 어디냐 했을 때 과거에는 없었거든요. 청년정책을 어디서 총괄하는지에 대한 부분이 불분명해서 국회의원도 그렇고 청년단체들이 정부와 얘기하고 싶을 때 소통의 창구가 없었는데, 오늘도 국무조정실에서 나와서 말씀을 주셨지만 어쨌건 지금 정부에서는 청년정책의 컨트롤타워, 소통의 창구는 일단 국무조정실로 정리가 거의 된 것 같습니다. 저는 그게 문재인 정부에서 그리고 청년미래특위가 일궈낸 큰 성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국무조정실에서 좀 더 많은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지난주에 청년일자리대책 발표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국무조정실의 역할이 있었는지 저는 약간 의문입니다. 발표 자료나 내용에서 국조실이 빠져 있어서 국조실에서 조금 더 주도적인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이게 일자리에 특화된 대책이었기 때문에 국무조정실이 할 일이 많지는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하시기로 하셨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자문위원님들 많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김가람 위원님께서 중소기업 취업자 세제 혜택이나 전월세 보증 저리대출 이런 부분도 말씀 주시고 그리고 김석호 위원님, 엄창환 위원님은 특히 중앙정부가 획일적으로 사업을 기획하고 이것을 내려 보내다 보니까 각 지방정부마다 편차도 크고, 물론 예산 제약 때문이기도 합니다마는 편차도 크고 특히나 수도권 청년들을 지방으로 유인할 만한 대책이 잘 안 나온다, 이런 따끔한 지적들도 하신 것 같습니다.

물론 지난주 청년일자리 대책에서도 그런 비슷한 대책을 발표하기는 했습니다. ‘지방정부 위주로 대책을 많이 마련하겠다’ 이런 말씀도 있었고,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마는 어제 정부에서 마련한 헌법 개헌안 초안에서도 지방정부 그리고 지방재정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말씀들을 주셨고요.

그래서 우리가 중앙정부 위주로 청년대책들을 만들어 가고 있는데, 아마 앞으로는 지방정부에서 훨씬 많은 정책들, 특히나 지방의 지역별 특색에 맞는 정책들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석호·안현중 위원님께서 주로 청년 정책에 청년 목소리가 반영되지 못하는 부분들, 그러다 보니까 청년들의 관심도도 떨어지고 그리고 아이로니컬하게도 그렇기 때문에 청년정책들을 청년들한테 막 정리를 해서 알려야 되는, 포털도 만들어야 되고, 사실은 이게 잘 만들어져 있다면, 그리고 많은 청년들이 정책을 만드는 데 들어가 있었다면 굳이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청년들이 쉽게 알 수 있는 부분들일 텐데, 지금은 청년들이 없고 어떻게 보면 청년들의 것과는 조금 동떨어진 정책들이 계속 양산되다 보니까 홍보채널을 만드는 것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현중 위원님이 계속 말씀 주신 부분인데, 저도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와의 청년정책과 관련된 소통 채널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것도 저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부분들은 청년기본법에 가급적이면 다 담을 수 있도록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자문위원님들이 말씀을 주시지는 않았는데, 현재 각 지방정부에 청년정책위원회, 청년정책네트워크 이런 식으로 자문기구·심의기구·정책기구들이 있는데 여기는 당연히 청년들이 다 들어가는데, 이런 기구들뿐만 아니고 정부나 지방정부에서 만드는 위원회 같은 것들도 있을 수 있는데……

대부분은 여성들이 거의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 청년위원들도 같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서 어떤 정책을 만들어 갈 때 성인지적 관점도 들어갈 수 있고요. 여성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청년과 관련된 부분들이 같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도 앞으로 반영을 하겠고요.

제가 오늘 쪽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자문위원님들이 좋은 정책들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실 묻고 싶은 것은 우리가 과거 정부에서도 많은 일자리 정책들을 포함해서 청년정책들을 만들어 냈는데,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최근

에 발표한 일자리 정책을 포함해서 나아가고 있는 방향이 맞는 건지……

그러니까 정말 많은 정책들을 만들어 내고 있거든요. 저는 디테일은 약간 문제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최소한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이 맞는 건지 사실 이게 궁금하거든요. 나아가는 방향이 맞다고 생각하면 조금 더 디테일을 보강해서 나아가면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어서……

우리 자문위원님들께서 물론 어떤 디테일한 부분보다는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하고 있는 청년정책이 만들어 가고 있는 방향성에 대해서 혹시 답변을 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주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김석호 자문위원님께서 먼저 말씀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른 위원들께서도 의견들이 있으시면 조금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문위원 김석호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대통령께서 발표하신 게 일자리에 집중한 정책이었기 때문에 제가 발제문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번 강조드립니다마는 이게 장기적 전망을 가지려면 일단 일자리에 초점을 두고 주거문제를 해결하고 금리 지원하고 이런 문제들은 처음에 할 수 있는 당연한 접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부분들의 실효성을 점검하면서 계속 수정보완해 나가고 그와 동시에 청년 문화라든가 청년세대 내의 다양한 이질성들이 존재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일자리 정책을 얘기하면 동질적인 청년집단을 가정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청년세대 내의 다양성과 이질성을 고려할 수 있다면 더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년의 정치적 대표성이라든가 문화적 다양성을 일자리 정책과 같이 보완해 나간다면 저는 일단 첫 삽은 잘 뚫다 생각이 들고요.

하나만 아쉬운 걸 말씀드리자면 언론에서 많이 지적은 했는데, 지금 저도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공시족 같은 경우 이런 대책들은 빠져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경우는 앞으로 일자리 대책이나 다른 청년지원책에서 보완을 해 주면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문위원 임창환 조금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다.

우선 특단의 대책이라고 말했던 것이 정확하게 일자리 정책인데요.

우선 그 관점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기대되는 지점도 있었고 약간 걱정되는 지점도 있었는데요. 일자리 정책 기준으로만 놓고 보면, 저는 일자리 정책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예산을 줄여야 된다 없애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것은 아니고요.

다만 청년이 겪고 있는 사회 문제를 일자리 문제로만 봤을 때 그리고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같은 문제로 해석을 했을 때 보통 나타나는 게 노동시장의 문제와 비노동시장의 문제를 통합하는 것들, 격차를 줄이는 것 그리고 일자리 창출로 귀결되는 정책들이 전반적으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사실 실업대책이 김대중 정부 때부터 있지 않았습니까? 계속 어떤 정책들을 쓰고 있는데, 사실 이번 정책이 완전 새롭다고 보기는 약간 애매해요. 기존에 있는 것을 약간 보완했거나 발전시킨 것들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취성패 3단계에 머물러 있던 청년수당이 바깥으로 빠져 나온 것은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다만 어쨌든 전반적으로 기존에 있던 것들의 흐름을 이어오는 것들이 있어서 이게 과연 해결이 가능한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청년 문제를 구조화하기 위한 작업은 통합적·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제가 좀 전에 이야기해 드렸던 맥락에서 그동안 지방정부 청년정책이 이렇게 흘러왔는데 왜 이런 것들을 잘 존중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저는 처음에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수** 김병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는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의 김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영 위원** 부산 연제 국회의원 김해영입니다.

김석호 자문위원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청년을 고용하는 기업이나 기관에게 지원하는 방식보다는 청년이 장기적 전망을 가지고 자신의 꿈을 가다듬고 역량을 배양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는 방식이 더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런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요.

지금 청년실업 문제가 워낙 심각하기 때문에 청년을 고용하는 기업에게 지원하는 방식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러한 청년들에게 시간을 벌어주는 그러한 방법도 우리가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께서서는 기본소득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기본소득을 한다면 그 대상 그리고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얼마 정도의 금액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자문위원 김석호**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책들이 불필요하다라기보다는 실제로 정말 일자리 중심으로만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시간을 벌여 주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소득인데, 저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입장이 뭐냐 하면 기본소득에 대한 정책을 몇 달 동안 얼마씩 하는 걸 정하기 전에 아까 말씀드린 연구결과, 일종의 사회적 실험이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서울시에서 청년수당이라든가 성남시의 청년배당을 해 왔는데, 물론 그 효과에 대한 이런저런 연구결과들이, 아마 지난주에 서울시 청년수당에 대한 결과가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에서 발표된 것을 본 적이 있는데, 그런 사회적 실험들에 대해서 지역별로 그리고 기관별로 먼저 하고 그리고 이것을 학계나 정책 전문가들이 그 연구결과들을 면밀히 검토한 다음에 한국사회에 맞는 청년 기본소득이 어느 정도였을 때 어떤 효과가 난다는 것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자료 축적과 연구결과 공유가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연구자로서 봤을 때 이게 얼마나 걸릴 거더라는 것은 사실 선불리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하나 예를 드리겠습니다.

미국에서 ‘무빙 투 더 오퍼튜니티(Moving to the Opportunity)’라는 일종의 빈민 젊은이들의 삶의 질 향상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이게 초기 5~6년 동안은 실패로 귀결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대도시에서 계속 자료를 축적해 가면서 이들의 성장 과정을 관찰해 보니까보스턴 지역에서 재작년에, 그러니까 한 20년 정도 지나서 MTO 사업의 효과가 성공으로 판명되던 예도 있었거든요.

다시 말해서 청년들이 장기적 전망을 가지고 뭔가 시간을 벌여 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정책 연구하는 이런 입장에서도 실제로 충분히 예산을 투입하고 자료를 수집하고 축적하고 그 연구 결과들을 차곡차곡 쌓아 가는 노력들, 그래서 그런 사회적 실험을 가지고 같이 논의하는 자리가 먼저 선행돼야 되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해영 위원** 관련해서 국무조정실의 사회정책 총괄과장님 나와 계신데요. 정부에서는 지금 지자체에서 청년수당이라든지 청년배당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김석호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체계적으로 그 효과에 대해서 분석하고 평가하고 있습니까?

**○국무조정실사회정책총괄과장 김달원** 서울시 청년수당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평가한 것을 저희들이 참고하고 있고 정부 차원에서는 아직까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김해영 위원** 물론 서울시에서 분석하겠지만 정부 차원에서도 체계적인 분석과 평가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무조정실사회정책총괄과장 김달원** 참고하겠습니다.

**○김해영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하나 했는데 5분이 가 버렸네요.

**○자문위원 김석호** 죄송합니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해영 위원** 그리고 또 말씀하신 것 중에 트위터·페이스북 등과 같은 SNS 또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청년세대가 가지고 있는 마음과 가치관, 문화 이러한 특성을 파악해서 청년이 처해 있는 노동시장에 대한 분석과 결부시켜서 우리가 정책을 세우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참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국무조정실의 과장님,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SNS에 대해서 빅데이터 분석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국무조정실사회정책총괄과장 김달원**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개별적인 국책연구기관의 연구원들이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는 한 아직 없습니다.

**○김해영 위원** 굉장히 좋은 제안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연구를 해 봐 주십시오.

**○국무조정실사회정책총괄과장 김달원** 예, 알겠

습니다.

**○김해영 위원** 지금 청년 연구기관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국무조정실사회정책총괄과장 김달원** 지금 청소년정책연구원은 있고요 그다음에 한국행정연구원의 일부 연구원들이 청년정책을 연구하고 있고 또 여성정책연구원에서도 하고 있는데 청년정책 연구원은 없습니다.

**○김해영 위원** 그런데 청소년정책연구원은 조금 결이 다르지 않습니까?

**○국무조정실사회정책총괄과장 김달원** 예, 연령이 조금 다른 결로 알고 있습니다.

**○김해영 위원** 그래서 예를 들면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산하에 청년연구원을 설립한다든지 또 그 외에 국가적으로 이런 청년 연구기관 설립도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석호 위원님께서 ‘청년정책의 중앙타워를 설립하는 데 그치지 않고 청년조직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셨는데요. 청년조직 활성화는 정부보다는 정당의 역할에 조금 더 가깝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문위원 김석호** 맞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동의하고요. 이게 기본적으로 앞으로의 정부정책이라든가, 특히 청년정책 같은 경우에는 그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게 중요하고 그 소통 채널을 리던던트(redundant)하더라도 여러 가지 채널을 만들어서 다양한 목소리를 듣는 게 중요하고 거기에서 정당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겠지요.

**○김해영 위원** 저희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 정책관님 나오셨는데요. 지금 지방정부의 청년 전담부서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고용노동부청년여성고용정책관 김덕호** 지방에 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있고요, 그게 101개의 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있습니다.

**○김해영 위원** 지방정부 차원에서 청년 전담부서가 어떻게 됩니까?

**○고용노동부청년여성고용정책관 김덕호** 지방정부는 현재 각 기초나 광역 단위로 일자리지원센터가 있는데 고용복지플러스센터로 일부 들어와서 함께 일을 하고 있고요 또 자체적으로도 일자리지원센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해영 위원** 그러면 지금 중앙과 지방의 쌍방향적 소통이 어떤 양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고용노동부청년여성고용정책관 김덕호** 지방에 고용정책협의회가 있습니다. 노사민정협의회의도 있는데요, 그것은 노동 분야까지 합친 것이고요. 고용정책협의회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고용과 관련된 정책을 논의해서 하는 기관입니다. 협의체입니다.

○**김해영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산업에 대한 맞춤형 일자리 정책이 제대로 실현되는지 위원님을 포함해서 의문을 갖는 분들이 계신데요.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고 중앙과 지방의 쌍방향적 소통에 대해서는 저한테 따로 한번 보고를 해 주십시오.

○**고용노동부청년여성고용정책관 김덕호** 예, 한 말씀만 더 드리면 훈련과 관련해서는 지역인적자원위원회라고 또 있어 가지고 훈련 부분과 관련해서도 별도로 지자체와의 협의기구가 있습니다.

○**김해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수** 김해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부처에서는 위원님들 답변에 대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한 것을 그냥 넘기지 마시고요. 반드시 서면으로 해당 위원님은 물론이고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결과를 한번 주십시오.

다음은 자유한국당의 존경하는 신보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보라 위원** 우선 안현종 자문위원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지난 정부 때 있었던 청년위원회에서 활동을 열심히 하셨는데 없어서서 굉장히 만감이 교차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청년위원회라고 하는 조직이 어떻게 보면 그래도 청년들과 같이 소통하고 대통령 직속 기구로서 유일하게 대통령에게 자문을 할 수 있는 그래도 나름 처음 만들어진 기구였는데 그게 없어졌기 때문에 이런 폐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일자리위원회가 그 기능을 전혀 대체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일정 정도 그러한 전담기구가 사라지고 그다음에 일자리위원회는 그런 기능을 대체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면 분명 빈틈과 공백이 생기기 마련인데 그중에서 가장 크게 문제로 느끼는 공백과 빈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자문위원 안현종** 앞서 엄창환 위원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비슷하게 해 주셨었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청년위원회라는 조직은 주제에 대한 부분들은 일자리에서 주거복지, 금융 관련된, 학교의 학사 문제까지도 전방위적으로 주제를 다룬 바가 있었습니다. 이후에 일자리위원회로 어느 정도의 연구적 특성들이 이관된 것들로 대외에 보도 많이 나왔는데요.

일자리위원회는 기본적으로 일자리, 그 태생의 워딩 자체가 일자리가 생겨야 되는 것이 본래 조직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것에 집중해서 하시는 것이 당연한 부분일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청년정책에 대한 부분의 컨트롤타워가 없다라는 얘기들이 계속 반복되어 나오는 이유들도 그런 것과 닿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때문에 향후에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 현장에서 청년정책에서 일자리는 기본이다, 그것 이외에 필요한 부분들, 여러 가지 정책적 실험들이 지자체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런 주제들과 어젠다들이 잘 합해져서……

앞서 저도 내용에 넣었지만 청년정책의 부서에 대한 부분들도 마찬가지로입니다. 아까 김 위원님께서 고용부에서 나오신 분께 조직에 대한 부분들 질의를 해 주셨는데 지자체에서는 기본적으로 정책에 대한 다양한 장르들로 부서들이 세워져서 활동들을 열심히 하고 계시고 앞서 기본조례에 대한 설정들 되어 있는 것을 조사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위원회와 기본조례가 있는 광역시·도단체들 또 기초단체들도 대부분 정책부서에 대한 것들을 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반복적인 이야기지만 그런 부처들, 부서들이 주제와 내용에 따라서 종합적으로 연결되는 고리가 될 수 있는 조직이 있어야 청년들도 여러 가지 주제들 이야기할 수 있는 창구가 되어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랬을 때 거기에 예산과 인력들이 모여져서 집중적인 논의가 될 때 각각의 작은 문제부터 큰 문제까지 하나하나 해결해 갈 수 있을 만한 원동력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신보라 위원** 여기 계신 국무조정실…… 과장님이신가요?

○**국무조정실사회정책총괄과장 김달원** 예.

○**신보라 위원** 오늘 대체적으로 전달체계가 굉장히

장히 부족하다라는 질의를 여러 차례 하고 있는데 결국 그 빈틈을 메울 건 지금 현재 국무조정실이 유일하게 그 역할을 담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청년미래특위에 업무보고를 하셨을 때도 ‘국무조정실이 컨트롤타워 기능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기억하시지요?

○**국무조정실사회정책총괄과장 김달원** 예, 기억합니다.

○**신보라 위원** 12월 달에 국무조정실 업무보고 하셨던 내용을 보면 ‘청년의 정책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서 정부정책을 자문·심의·의결하는 각종 위원회에 청년위원 참여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행정기관의 여러 위원회들에 청년들의 제도적 참여를 보장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내용인데 그런 제도적 준비는 되어 있습니까?

○**국무조정실사회정책총괄과장 김달원** 그 부분은 위원회를 담당하는 행안부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신보라 위원** 협의 중에 있으세요?

○**국무조정실사회정책총괄과장 김달원** 예.

○**신보라 위원** 그러면 그 협의 내용을 의원실로 정리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조정실사회정책총괄과장 김달원** 예, 알겠습니다.

○**신보라 위원** 그리고 다음으로 송보희 자문위원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주거안전망 강화 관련해서 매우 공감되는 발제를 해주셨는데요. 저도 이 부분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여러 내용들을 살펴보던 와중에 우리가 청년을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을 행복주택이나 청년전세임대주택 이런 것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책을 살펴보니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로 나누어지고 대학생 중에서도 기본적으로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 예정인 사람이 있고, 이 조항이 새롭게 추가됐는데 졸업을 하거나 중퇴를 하고 나서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그러니까 졸업을 하고 그 다음에 취업은 하지 않은 그 상태에 있는 사람들도 행복주택의 입주 자격이 주어졌어요.

저는 그건 좀 더 진전이 있는 정책이라고 보는데 2년이라는 그 규정을 굳이 둘 필요가 있나. 그러면 예컨대 2년 만에 취업하지 못한 사람들은

더 사각지대에 놓이는 걸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문위원 송보희**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사실 과거보다 청년의 세대가 굉장히 과편화되어 있고 다분화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과거에는 졸업을 하면 바로 취업을 했고 취업을 하고 나서 결혼을 해서 출산을 했지만 현재는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기간도 굉장히 길어졌고 졸업뿐만 아니라 졸업도 유예하는 친구들도 있고 말씀하신 대로 졸업한 후에 취직을 했다가 이직을 하는 경우에 빈 공간이 있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저만 해도 2년이 지났고 구직기간이 있는 기간이 있었는데, 저는 또 수입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청년이었고 함에도 불구하고 행복주택의 기준이 되지 않더라고요.

○**신보라 위원** 왜 그렇지요?

○**자문위원 송보희** 우선순위에서, 기준에서 많이 밀렸던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도 굉장히 일부분에 속해져 있고요, 신혼부부도 마찬가지고. 저도 한 두 번인가 신청했는데 다 떨어지고 하면서 도대체 이것은 누가 되는 것인가라는 것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됐었는데요.

특히나 주거 부분의 경우에는 그 기준 자체가 너무나 현재의 청년들이 살고 있는 사회를 반영한 기준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청년들이 살고 있는 모습들을 면밀하게 분석을 해서 기준이 2년이 중요하고 1년이 중요하고 3년이 중요한 게 아니라 현재 주거가 필요한, 지원이 필요한 청년들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게 정책이 설계되어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유연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신보라 위원** 1분만 더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이명수** 예.

○**신보라 위원** 여기 지금 국토교통부의 주택정책관님 계시지요?

○**국토교통부주택정책관 김흥진** 예.

○**신보라 위원** 방금 이 내용 들으셨지요?

○**국토교통부주택정책관 김흥진** 예, 알고 있습니다.

○**신보라 위원** 제가 봐도 사회초년생으로 가기까지 있는 분들이 실은 우리가 말하는 소위 니

트예요, 취업도 되지 않고 졸업은 했으나 일자리는 구하지 못한. 그런데 저는 2년 규정이 너무 과도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걸 좀 풀 방법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국토교통부주택정책관 김흥진**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저희가 관련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부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해서 소득활동 여부라든지 졸업 이후의 기간과 관계없이 39세 이하면 행복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것으로 관련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신보라 위원** 정말 잘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그러면 그 내용은 정말 홍보가 잘 되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제가 아주 간략하게만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30페이지에 보시면 송보희 자문위원이 얘기한 부분에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비중이 우리나라만 특이하게 영리조직과 개인이 제공하는 비중이 높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무래도 이 비중을 조금 더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렇다면 영리조직과 개인이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는 그 현황이 어떤지 그리고 정부는 어떤 방식으로 이러한 공공임대주택을 개인이나 영리조직이 공급하는 방식을 지원하는지 그런 구체적인 법적 근거나 내용이나 현황이 있으면 그것을 정리해서 의원실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주택정책관 김흥진** 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보라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수** 신보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자유한국당의 염동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동열 위원** 태백·횡성·영월·평창·정선의 염동열 위원입니다.

제가 국회 활동 6년 동안 각종 토론회, 공청회 자리에 있었습니다만 오늘 진술인들의 연령이 최고 젊습니다. 우리가 '청춘예찬'이라는 책에 보면 '청춘, 청년 이는 듣기만 해도 가슴이 설레는 말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만 그래서 지금 많이 가슴이 설레고 있습니다.

한국JC 회원이 한 2만 5000명 되지요? JC중앙회장 김가람 회장님 나오셨고.

김석호 교수님 유일하게 청년단체는 아닌데 그

래도 젊어서 에너지를 느끼는 것 같습니다.

○**자문위원 김석호** 그렇게 젊지는 않습니다.

○**염동열 위원** 송보희 청년정책학회장님, 안현종 전 직속 청년위원회 위원장님이시네요. 엄창환 청년네트워크 회장님, 그리고 황인국 청소년재단 이사장님, 어떻게 보면 청년단체를 총망라한 지도자들이 함께하셨습니다.

오늘 진술인의 내용을 보면 대부분 주거 문제, 주택 문제지요. 그리고 일자리 문제, 지역 간의 불균형 문제가 대체적으로 공통적으로 자리하고 있는 데요.

김가람 회장님, 우리나라 청년정책을 몇 개 부처가 관장하고 있는지 아세요?

○**자문위원 김가람** 자세히는 모르고 왔습니다만 오늘 와서 보니까 총리실에서 주관해서 하시는 것 같습니다.

○**염동열 위원** 몇 개 부처……

잘 모르지요?

김석호 교수님이 대부분 잘 정리를 해 냈는데……

송보희 학회장님, 청년정책에 필요한 예산이 1년에 얼마 정도 된다고 보세요?

○**자문위원 송보희** 필요한 예산이요?

○**염동열 위원** 전체 청년정책이라는 이름으로 예산이 선 게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자문위원 송보희** 계획상으로는 2조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염동열 위원** 제가 알기로는 25조 971억 원 이렇게 돼요.

안현종 자문위원, 그렇게 되지요?

○**자문위원 안현종** 예산의 기준들이 달라서 책정하기가 어려우신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염동열 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총리실 과장님, 청년정책 몇 개 부처가 관장하는지 아세요?

○**국무조정실사회정책총괄과장 김달원** 약 15개 쯤……

○**염동열 위원** 제가 알기로 청까지 17개.

예산 아시지요? 25조.

○**국무조정실사회정책총괄과장 김달원** 예.

○**염동열 위원** 그렇지요? 맞으세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청년정책에 지금 25조 971억 원 막대한 돈을 쏟아 붓습니다. 그런데 과연 청년들은 이 정책에 대해서 얼마큼 알고 있는가. 희망의 사다리를 올라가기 위해서,

19~40세까지 청년 나이로 보는 데 있어서 얼마만큼 내가 19세, 20세, 25세, 30세에 청년 자기설계, 인생을 설계할 수 있는가.

제가 도표를 그려 보니까 정부정책이 16개 부처에서 수십 개예요. 그런데 우리 니트족이 지금 177만 명 아녘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놀고 있는 청년들이? 그들에게 희망을 불어넣어 주고 그들에게 일할 수 있는 계기를 주고, 그다음에 자기가 자기 인생을 설계하면 정부정책은 얼마든지 내 주변에 가까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따로 논다는 거예요.

저는 지난번에 청년 특단대책에서 중소기업에 1000만 원을 지원하는 것, 만약에 청년미래위원회가 있는데 우리하고 토론했다고 한다면 저는 이렇지는 않다고 봐요. 그렇지 않겠어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정책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산을 어떻게 만드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타깃별로, 19~40세까지의 연령별로 지역별로 그리고 계층별로 거기에 맞춤 전략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 효율적이지 못하고 비생산적이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몇 번째 얘기를 하는데 답답합니다.

그래서 총리실에서 이것을 총체적으로 컨트롤 타워로 하고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정책을 펼치고 청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내 인생을 설계하고 열심히만 하면 대한민국의 국가는 나를 성장시켜 줄 수 있다, 발전시켜 줄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입니다. 그게 결여됐어요. 막대한 예산 쏟아 부으면서 결여됐단 말이에요.

기재부, 국토교통부 전부 다 잘 들으세요.

유아에서부터 무덤까지 우리나라 정책이 그 생애주기별 맞춤이 잘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나오신 분들이 전부 다 가장 기초적인 주거 문제, 일자리 문제 여기에 허덕이고 있어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송보희 학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문위원 송보희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염동열 위원 알고 있었어요? 예를 들어 교육부의 취업지원 문제라든가 등록금 문제라든가 여가부의 청년여성 여러 가지 멘토 문제라든가 국토교통부의 주택 문제라든가 이런 것 전부 다 내용을 알고 있었어요?

○자문위원 송보희 대략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염동열 위원 대략적으로는 알고 있었는데 주변의 청년들은 그것 다 알고 있습니까?

○자문위원 송보희 많이 모르는 것이 사실입니다.

○염동열 위원 제가 청년이라고 생각하고 이 정책을 보니까요, 이 정책만 잘 타서 가면 절대적으로 대한민국 청년들이 실망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 흥분하는 거예요. 나중에 말씀 좀 주시고.

여기 기재부까지 4개 부처가 나왔지요? 내가 대안을 얘기할게요. 반드시 말로만 가지는 청년 컨트롤이 아니고 이 17개 부처 전체적으로 꺼내고 우리 과장님이 이것 전부 다 파악하셔야 돼요. 그리고 청년 아까 얘기했지만 계층별로 지역별로 그다음에 연령별로 타깃을 확실하게 정하세요.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청년정책을 홍보하세요. 희망의 사다리가 있으면 뭐합니까? 1단계 사다리로 올라가면 2단계 사다리가 뭐가 있고 2단계 사다리 올라가면 3단계 사다리가 뭐가 있는지를 청년들이 알 수 있게끔 홍보해 주세요.

그다음에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습니다마는 청년을 고용하는 기업인에게 1000만 원을 주기보다는 그 청년이 중소기업에서 예를 들어 3~5년 근무했다면 대기업에서 일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주면 되는 겁니다. 왜 자꾸만 공짜 일자리를 만드는 거예요? 청년들에게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힘, 적어도 일으켜 세워 주면 걷는 것은 청년들이 걸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걷고 뛰게끔 다 해 주는 것은 나는 정부정책이 잘못됐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계신 분들, 청년신용센터를 만드시고 DB화하세요. 내가 대학교 때 등록금을 빌려서 대출을 잘 갚으면 이 신용에 대한 퀄리티가 올라가는 겁니다. 또 내가 중소기업에서 한 2~3년 동안 근무했어, 놀지 말고 니트족이 되지 말고. 그러면 여기에 대한 인센티브가 올라갑니다. 또 자기가 봉사할 수 있는 봉사활동을 했어. 그러면 자기의 퀄리티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적어도 30~40세 때 주택을 소유하려고 할 때 대출도 대출금리를 낮춰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내가 대학교를 졸업하고 군대를 갔다 와서 사회에 정착하기까지 열심히 국가가 주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잘 한다고 한다면 나는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 아니겠어요? 그래서 청년



신용센터 이것을 DB화시킬 수 있는 것을 만들어서 개개인의 신용카드를, 마치 우리 금융카드가 있듯이 얼마만큼 국가 프로그램에 충실했고 열심히 했고 자기의 본분을 다했냐고 하는 카드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중단기적 투 트랙으로 가세요. 청년 실업률 뭐 6.5%에서 9.7% 됐다 이렇게 해서 혼비백산해 가지고 정책 만들어 놓으니까 돈을 몇조를 써도 안 되는 거예요. 몇십조를 부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기적인 전략, 아까 얘기했듯이 홍보도 하고 청년들에게 희망도 주고 하는 장기전략하고 그다음에 단기적으로 청년실업이 나니까 단기적 전략, 투 트랙으로 가세요. 여기에 대한 비전, 여기에 대한 정책이 안 보이는 거예요.

존경하는 박찬대 위원님, 김해영 위원님, 권철승 위원님, 신보라 위원님, 다 젊은 사람들인데 제가 왜 여기 청년미래위원회에 왔느냐? 저도 김가람 씨 소속되어 있는 청년JC 중앙회장 출신인데 끊임없이 고민했어요, 청년 때. 저는 대관령 촌놈이에요. 내가 설계하고 내가 희망을 가지면 된다고 하는 생각을 가졌던, 그리고 그것을 어느 정도 이루었던 청년 중의 한 명이에요. 그리고 정말 없고 부모 탓하고 또 자기 지역 탓하고 자기를 부정하는 그런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이 자리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정부의 정책이 저 끝에 닿아 있는 청년들에 닿지 않더라 하는 것이 제가 흥분스럽고 답답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목소리를 좀 높여서 얘기하는 것은, 제발 정부 정책 하시는 분들 그냥 단기적으로 임시 땀땀으로 하지 마세요. 제가 얘기했던 이런 네 가지 정도의 시스템을 가지고 종합적인 청년정책을 가지세요. 그러면 저출산 문제도 해결됩니다. 내가 안정이 되고 미래가 보장되는 데 왜 결혼 안 하고 왜 애를 안 낳겠어요? 그래서 저는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국가가 나선다고 하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듯이 이제 우리 한 사람의 청년을 위해서 국민 전체가, 국가 전체가 함께한다는 생각을 가지셔야 합니다.

정부는 그렇게 하시고, 시간을 많이 썼습니다 마는 진술인들한테 짤막하게 30초씩 제가 한 얘기에 대해서 감회라고 그럴까 제안이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가람 회장님부터.

○자문위원 김가람 존경하는 한국청년회의소 중

앙회장 출신이시지요. 반대로 또 위원님 말씀 들어보니 우리 청년들 또한 정부 정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우리 스스로 또 뒤돌아보면서 반성할 필요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염동열 위원 죽 돌아가면서 하시지요.

○자문위원 김석호 청년들한테 정책의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은 고민을 많이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전달체계의 문제인데 그런 부분들은 지금 복지부의 전달체계, 원스톱으로 하는 체계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국내 사례나 해외 사례 벤치마킹하면 개인 수준에서 청년한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문위원 송보희 대한민국에 사는 청년들이 '한국에서 살기 진짜 힘들다'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 문제는 심리적인 문제도 많이 기인한다고 봅니다. 내가 노력해도 공정하게 보상받을 수 없고 무기력하고 자괴감에 빠지는 이 상황 속에서는 자신감을 불러 일으켜 주고 내가 노력한 만큼 보상받을 수 있다라는 희망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그러한 정책 안에서는 정말 수요자 중심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물론 단계적인 정책도 필요하고 장기적인 정책도 필요하지만 도대체 청년들이 어떠한 심리상태를 가지고 이 국가를 바라보고 미래를 생각하는가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주시고 조금 더 집중해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문위원 안현종 상황의 다양성들이 기존 세대가 보시는 것하고는 지금 현저히 다릅니다. 그래서 그러한 현장에서의 디테일과 차이성들을 잘 살펴봐 주시면 믿고 따를 수 있는 정책들로 좀 더 가까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문위원 임창환 아까 이야기해 주신 것, 뭐 24조 이야기해 주신 것 저는 사실 잘 몰랐습니다. 더 놀랍네요. 우리나라 법에 청년을 정의하고 청년을 지원하는 법은 딱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이라는 법 하나로 24조의 모든 예산을 예를 들면 일자리에 모두 쏟아붓고 있다는 게 현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다충화시키고, 학계에서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국 인구에서 아마 한 30% 정도 차지하겠지

요, 전반적으로. 그리고 보통, 제가 중앙정부의 정확한 값은 모르겠습니다만 지방정부로 보면 대부분 세대별 인구의 한 2위 정도가 되더라고요. 40~50대가 가장 많고 그다음에 20~30대가 제일 많던데 이 세대를 정의하고 예를 들면 법률적으로 지원하는 기준 근거가 되게 빈약한 것 아닌가 하는 얘기를 저는 다시 한번 느끼게 됐고.

그리고 아까 ‘나 때는 이랬다’는 얘기를 계속 해 주셨어요. 저는 모릅니다, 위원님이 그 세대에 청년을 어떻게 사셨는지. 그리고 위원님은 제가 지금 청년세대를 어떻게 살고 계신지 모르실 겁니다. 이것을 꼭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문위원 황인국 염동열 위원님 열정에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기본적으로 각 법에 따라서 청년들 연령대에 대한 기준이 다르기는 합니다만 청소년 기본법에도 9~24세까지가 또 청년고용촉진법에도 15~35세까지가 청년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들에서 20대에 있어서 25조에 달하는, 위원님의 추정상, 이런 예산들이 되어도 실제로 삶에 체감되는 변화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은 지적하시는 바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구체적으로 삶에 체험되는—담론이 아닌 청년들 스스로가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는—이런 것들이 진행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그러기 위해서 20~30대에 있어서 초·중·고등학교 내내 입시적인, 규율적인 이러한 폐쇄적인 교육체계 속에서 자라난 청년들에게 그 무엇을 기대하지 말고 저는 18세 선거연령 인하를 포함한 전향적인 청소년 교육정책의 전환이 사전되어야 청년세대에 있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단계별 타겟에 맞게도 우리 청년들 스스로가 또 다른 성공신화들을 위원님처럼 써 내려갈 수 있다, 선거연령이 18세부터 주어져야 된다, 기본은 그것부터라고 생각합니다.

○염동열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수 염동열 위원님 열정적인 질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의 박찬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대 위원 인천 연수갑 박찬대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 과거와는 다른 방법으로 풀어 나가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사회적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저성장이 오랫동안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저도 가끔씩 우리 후배 세대들하고 얘기를 나눌 때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성장의 과실을 우리가 다 따먹고 그때 사실 미래 세대를 위해서 비축해 놓거나 준비해 주지 못한 것 아닌가, 고성장이 예상되고 있을 때 결국 미래의 저성장이 예측되는 그 시점에 더 붙어 살 수 있고 미래 세대가 꿈을 가질 수 있는 사회 시스템을 만들지 못한 선배 세대의 책임도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또 삶에 있어서도 우리 때와는 다르게 자아실현 욕구라든가 그다음에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가 있고 그런데, 사실 먹고사는 문제, 생존의 문제, 경제적인 아주 낮은 단계의 부분만 해소해도 만족스러웠던 시대가 있었지만 지금 우리 청년들은 그렇지 못하지요. 우리 부모 세대의 경제적 성장 기반하에서 자아실현이라든가 사회적 인정을 받고자 하는 여러 가지 욕구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미 성숙되어 있는 사회적 욕구를 강제로 억제시키고 그리고 우리 성장 시대에 있었던 가치관으로 회귀시킬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에게 주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대한민국 사회가 앞으로 풀어 나가야 될 총체적인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저출산·고령화 문제 이것 누가 풀어야 되나요? 같이 풀어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청년들이 아마 가장 고통스러울 거라고 보입니다. 우리 사회의 교육 문제, 경쟁 일변도의 이런 사회구조, 누가 가장 고통스럽나요? 제가 볼 때는 청년이 가장 고통스럽다고 보고 있거든요.

저번에 저출산·고령화특위도 참석을 해 봤고 그리고 이번에 다시 청년미래특위에도 같이 참석을 하고 있는데 결국 대한민국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 어우러져 살고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균형을 맞춰 살기 위해 가지고는 이러한 문제들이 단편적인 정책의 방법으로는 해소될 수 없다, 특히 경제 문제, 공정한 경제 생태계 문제, 교육 문제 이것도 역시 오로지 경쟁 일변도로 가는 이런 것 이제는 전환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회적 대전환기에 우리 청년 문제가 딱 걸려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단기적인 정책이라든가 예산 가지고는 결코 풀 수 없기 때문에 아까 많은 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체계적이고 그리고 통합적

이고 장기적인 안과 함께, 그렇지만 아주 급한 단기적인 문제도 같이 풀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안현중 전 대외협력팀장님이시지요.

○자문위원 안현중 예.

○박찬대 위원 오늘 제출하신 토론문을 보니까 청년정책 전달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 나왔어요. 대외적인 청년정책 홍보와 SNS 정책 홍보 등에 대한 내용들이 주로 다루어져 있는데 제 생각에는, 아까 그런 말도 하셨지요. 우리 세대는 지금 청년들의 현재의 문제점이라든가 문화를 이해하지 못할 거다, 청년들도 우리 세대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현실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청년 활동가 그리고 정책을 만들어 나가야 될 중앙부처의 공무원 사이의 의사전달체계 강화 방안 이런 것과 같은 내부 정책 입안 과정의 전달체계가 강화되는 의견들이 조금 생략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리고 또 토론인께서는 전임 정부의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의 대외협력팀장으로도 계셨지 않습니까?

○자문위원 안현중 예.

○박찬대 위원 그래서 지금 컨트롤타워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 또는 총리실 산하의 자문기구 설치·운영에 대한 효율성에 대해서도 다른 누구보다도 아마 의견을 잘 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과거 경험에 비추어 봤을 때 대통령 직속이나 총리실 산하에 청년위원회 기구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청년 활동가들이 참여하고 의견을 개진하는데 있어서 그 실효성이 어느 정도 되는지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문위원 안현중 필요성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은 각 부처들은 각각 부처명에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가 명시되어 있는 조직들입니다. 하지만 계속 인지하는 바와 같이 청년의 문제들은 사실 한 분야로 국한되지 않고 복합적으로 얽히고 설켜 있는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법에 대한 논의를 할 때 주무부처에 대한 논의를 하고 고민을 할 때 총리실에 대한 얘기들을 주저 없이 매번 매번 얘기하는 이유들은 그래도 전체의 영역들을 총괄해서 할 수 있는 조직은 거기가 맞지 않겠느냐라는 상식적인 선에서의 제안들이

많이 있었고 그게 지금 점점 구체화돼 가고 있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협의를 대한 부분들은 반드시 각 주체들이 되시는 분들 또 수용이 되시는 분들이 함께하는 자리를 통해서 정책에 대한 얘기들이 논의가 되어야지만, 사실 청년들이 정책 전문가들은 아닙니다. 하지만 정책에 벌어지는 내용들에 대해서 이게 현장에서 과연 접목되는 게 맞는지에 대한 의견들과 의사들은 충분히 전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제가 서울시에서 하는 청년정책위원회에 참석을, 배석을 해서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쪽의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담당관들께서 정책들을 발표하시고 그에 대한 위원들, 청년 당사자들께서 그에 대한 부족한 점 또 전환해 줬으면 부탁하는 점들을 제시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들 또 안 되는 이유에 대한 설명들이 오고 가면서 정책들이 다듬어지고 그것들이 점점 완성에 가까운 모양들로 갖춰 가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그런 모습들이 비단 서울시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 혹은 정부에서도 분명히 있을 수 있는 모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후에 그러한 조직들이 만들어져서…… 공무원분들 정말 열심히 일하시고 정책들 정말 잘 설계하십니다. 하지만 예산 사용과 여러 가지 관성적인 부분들 때문에 넘어설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청년 당사자들이 주장하시고 이야기하면서 한 단계 한 단계 혁신적인 발전들을 할 수 있는 요소들을 지적해 주신다면 전과는 조금 더 다른 모습들의 정책들, 청년이 납득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을 만한 이런 부분들이 많이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찬대 위원 감사합니다.

시간을 다 써 버렸네요.

○자문위원 안현중 죄송합니다.

○박찬대 위원 국무조정실의 김달원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염두에 두시고 총리님께도 의사를 잘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무조정실사회정책총괄과장 김달원 예, 알겠습니다.

○박찬대 위원 지금 청년 문제는 일자리 문제를 비롯해서 주거 문제 그다음에 교육 문제, 복지 문제가 종합적으로 얽혀 있는 문제점이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에만 집중한 나머지 혹시라도 복합적인 접근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러한 우려의 목소리도 존재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청년지원사업이 형식적이거나 중복되는 점은 없는지 잘 살펴보고 적합한 대상에게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 것이 맞는지 활동가들을 통해 가지고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는 만큼 국무조정실을 비롯한 정부의 관계자분들께서는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좀 더 각고의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간이 많이 가기는 했는데요. 저는 송보희 학회장님이 내신 토론문 중에서 청년 주거빈곤층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 주셨던 아이디어 상당히 재미있게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 청년들이 사실은 재활용해야 될 빈집의 경우에는 위치와 접근성이 매우 중요한데, ‘지·옥·고’라는 말도 있지 않았습니까? 지하 그다음에 옥탑 그리고 고시원에서 청년의 주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 지금 한 8만 호 정도, 그러니까 7만 9000호가 빈집이라고 얘기했는데 청년들이 이 비어 있는, 전국에 산재되어 있는 모든 빈집에 들어가서, 사실 여기서 주거하기를 원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위치와 접근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청년들에게 직접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용 자원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이것에 대한 점검이라든가 검토가 된 것은 있나요?

**○자문위원 송보희**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더 연구가 되거나 혹은 찾은 자료는 없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접근성 부분이나 그 빈집의 상황, 형태에 따라서 청년들의 니즈도 다양하겠지만 시도는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국에서 200호를 기준으로 시작을 했듯이 저희도 단 100명, 200명, 1만 명, 2만 명 점점 더 늘려서 이 부분이 완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시책을 해야지 이것은 조금 안 돼서 안 될 것 같고 이것은 접근성이 떨어지니까 시도조차 안 하는 것이 낫다라는 것은 저는 지금 현재 심화된 청년 문제에 있어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박찬대 위원**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님 와 계신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파악이 좀 필요하

지 않을까 싶은데요, 혹시 국토교통부에는 관련 자료를 갖고 계신지요?

**○국토교통부주택정책관 김흥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빈집이 한 112만 호 정도 되고 서울의 경우에 한 7만 5000호 되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빈집을 활용하려면 빈집에 대한 정확한 실태가 먼저 파악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련 규정을 개정해서 금년부터 각 지자체별로 빈집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태조사 결과가 나오면 빈집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찬대 위원** 꼭 좀 잘 실행해 주셔서 그러한 정보를 필요로 하고 활용하고자 하는 관계자분들에게도 그 정보를 좀 제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준비해 온 자료가 있긴 한데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수** 박찬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는, 오래 기다리셨는데 이채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익 위원** 울산 남구갑 이채익 위원입니다.

저도 지금 지역에 바쁜 일이 있지만 청년 문제가 원체 위중하고 또 시급해서 제가 울산에서 달려왔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청년정책 실패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단언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청년정책 수정하지 않으면 국가 재앙이 온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청년정책에 대해서 말만 번드레하고 실현 가능성 없는 것만 하고 구체적인 각론 부분은 거의 없다, 그리고 청년정책을 거의 시혜성으로, 돈으로 또 예산으로 퍼붓는 정책, 이래 가지고는 청년들의 미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국무총리실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들 나와 있는데 오늘 국회에서 제기되고 있는 부분이 국무총리에게 바로 전달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대통령에게도 전달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총론만 난무하고 각론 부분에는 거의 귀를 막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청년 문제를 얘기해 보면 정말 가슴이 답답하고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이 되겠는가…… 계속 총론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존경하는 위원장님께 하나 제안하고 싶은 것은, 청년미래특위에 하나라도 구체적으로 담아내야 되겠다. 이걸 꼭 해야지 이게 또 용두사미로, 말잔치로 끝나면 이 특위 하나 마나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개인적으로는 첫째 청년기본법 여기에 정말 우리가 담을 수 있는 부분은 철저하게 담고, 담는 것을 선언적으로 담을 게 아니라 매우 구체적으로…… 각론 부분에 구체적으로 역할분담을 다 감당해 내는 또 컨트롤 타워 문제도 계속했는데 이게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컨트롤 타워 부분이라든지 각 정부 부처가 해야 할 역할 부분까지도 구체적으로 청년기본법안에 다 담아내서……

존경하는 염동열 위원님께서 방금 얘기하신 1년 예산 25조, 엄청난 예산을 퍼붓고 있는데 과연 이게 제대로 실효성이 있는가, 25개 부처의 85개 사업에 25조나 퍼붓는데 왜 우리 청년들은 희망을 잃고 거리를 헤맵니까?

그래서 먼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청년기본법에 하여튼 담을 부분 다 우리가 담아내야 되겠다는 것하고 컨트롤 타워 이 부분은 이번에 꼭 매듭을 져야 되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지난번에도 청년지원 관련 위원회를 꼭 대통령 직속으로 가야 된다고 주장을 했는데 국무총리실이라고 하는 것이 거의 대한민국의 어려운 과제는 다 국무총리에…… 전연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대통령 직속으로 가야 되고 청년지원청이 꼭 신설되어야 된다, 이렇게 예산을 온 부처에 쏟아 붓고 컨트롤 타워가 없고 국무총리실이 조정 업무만 감당하니까 이게 되겠는가? 나는 안 된다고 봐요. 조직이 안 바뀌면, 조직을 신설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된다, 그래서 이번 청년기본법에 정부의 청년지원청 신설을 꼭 담아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먼저 첫 번째 청년 사회안전망 강화의 필요성 부분에 대해서 참으로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엄창환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대표님도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방정부의 청년정책에 대한 인센티브제 도입 이게 꼭 좀 돼야 되겠다.

우리나라는 역시 경쟁을 좀 도입해야 합니다. 지금 청년 문제가 부각되고 나서 아직까지 청년 관련 조례가 제정 안 된 자치단체도 있지만, 많이 돼 있지만 이게 아직까지도 거의 선언적 의미이고 구체성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방정부의 청년정책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가 도입이 되어서 경쟁구도를 좀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아무래도 수도권 쏠림 현상이 더 가속화될 것이다, 지역 불균형이 더 가속화될 것이다, 특히 지금 서울 같은 데는 박원순 시장 와서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의 열악 또 여러 가지 관심의 부족으로 많이 부족한데 이 쏠림 현상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아까 여러 지적이 됐습니다마는 안현종 팀장님께서도 정책 소비자의 니즈에 부합하는 생애주기별 정책 전달체계 이 부분이 나는 굉장히 취약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청년정책 컨트롤 타워가 구체적으로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과 맞춤형 청년정책 이 부분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돼야 되는지 한번 답변을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송보희 학회장님께서 얘기했던 빈집 활용 거주공유제도 근거법 마련과 관련해서, 빈집 활용은 좋은 정책인데 이 부분은 아무래도 귀농·귀향 이 부분하고 같이 좀 검토가 돼야지 도회지보다는 농촌 쪽에 빈집 활용 거주공유제도 부분이 아무래도 효과가 있지 않겠나 생각되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귀향·귀농 지원체계하고도 같이 맞물려서 검토해야 할 부분이 있지 않겠나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좋은 제안 있으면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문위원 안현종 저부터 말씀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제가 보건복지부의 사례를 거기에다가 접목한 이유들은 저도 그런 유의 여러 가지 정보들을 직접적으로 많이 접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의 착안이었습니다.

요즘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0세부터 개월 수마다 필요한 정책 정보들이 전달되고 있고요. ‘복지로’라는 채널을 통해서도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당사자가 누릴 수 있을 만한 체계에 대한 것들이 전부 세분화돼서 잘 전달되고, 정책 내용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착안해서 청년들에게도 필요하다고 하는 정책의 내용들이 지금 많이 나와 있고, 그런 것들이 시기마다 때마다 어떤 정책들이 준비되어 있으니 이런 것들을 신청하거나 누릴 수 있다는 내용들이 정확하게 잘 전달된다면 그런 부분들이 남이 쓰는 정책이 아니라 내가 누릴 수

있는 정책이다라는 시각 전환을 통해서 정책의 도달성들이, 효율성들이 그만큼 더 높아지지 않을까에 대한 부분의 제언들이었고요.

이어서 말씀드린 맞춤형에 대한 부분들은 청년들이 생각하는 정책의 선호도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좀 더 세밀하게 부처 쪽에 전달이 된다면 설계 단계부터, 입안 단계부터 여러 가지 내용들이 좀 더 최적화된 사항들로 나올 수 있지 않나라는 내용에서 제안을 드린 겁니다.

○자문위원 송보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귀농·귀촌에 대한 빈집 활용 부분도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빈집의 경우에는 특히 지역별로 특화된 상황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특화된 상황들을 잘 조사를 하고 분석을 해서 그에 맞춰서 그 지역에 주거가 필요한 상황의 사람들에게 지원해 주는 형태로 가 줘야 될 것 같고요.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청년정책에 있어서 지역 간의 컴퍼티션(competition)도 저는 좋은 방법인 것 같은데요. 다만 평가제도가 제대로 선행돼야 될 것 같습니다. 기존의 청년정책들이 굉장히 무작위적으로 만들어지는 이유는 단순히 취업률, 수를 늘리기 위함이라든지 그런 선정·평가 부분에 대한 기준 때문에 벌어지는 문제도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소요예산 대비 성과가 어땠는지 혹은 그 과정이 어떠했는지 혹은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나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했는지 등의 정성적인 평가기준이 선행된다면 훨씬 고품질의 정책들이 입안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문위원 엄창환 아마 저한테 청년정책 지역 격차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와 인센티브제도 어떠냐 질문을 해 주신 것 같아요. 관련해서 사실 제가 오늘 이야기했던 내용 중에 격차 해소 관련된 내용들이 많았고 그중의 하나가 지역 격차였는데요, 청년정책 도입하는 것에 되게 중요하다고.

그런데 인센티브제도하고 다른 게 어떤 게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조건을 달성하면 인센티브를 준다 정도로 저는 해석이 되는데요. 그렇게 가기 위해서 일단 선행되어야 되는 조건은 지역마다 격차가 다르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지금 있는 상황에서 인센티브제도 도입했을 때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역, 기존에 인프라가 많이 깔려 있는 지역이 인센티브를 가져갈 가

능성이 되게 높겠지요.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 그리고 재정자립도가 낮을수록 중앙정부 예산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지역에서 청년정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중앙정부 예산을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전반적으로 지방정부에 내려오는 예산은, 그러니까 주거도 그렇고 일자리도 그렇고 중앙정부에 의존도가 높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중앙정부에서 내려온 예산 가지고 일자리 정책을 주로 하게 되는데요. 다른 정책을 펼치고 싶어도 법률적인 제한 그리고 예산의 기준근거들 이런 것들에 막혀 가지고 다른 것들을 못 한다는 목소리들도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고려되면서 지역별로 지역의 특성에 맞는 또는 지역에서 원하는 정책들을 다양하게 펼칠 수 있는 시점이 되어야 인센티브제도 같은 것도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이명수 마무리해 주시지요.

○이재익 위원 시간이 많이 가서……

김석호 교수님, 제가 아까 얘기했던 청년지원청 신설과 관련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예산 25조가 투입되는데도 불구하고 정책의 효과가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전달 체계에 문제가 있고 컨트롤타워에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청년지원청 신설을 제가 얘기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김석호 교수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자문위원 김석호 기본적으로 제 입장은 제 발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청년정책 기획·실행 전담 기구는 필요하고요. 제가 보기에 그 조직이 위원회 형식으로 될지 청년청으로 될지 지원청으로 될지는 협의를 통해서 가능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만약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뉴질랜드나 이런 데처럼 청년부가 될 수도 있고요, 청년청이 될 수도 있겠지만 아직 그것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나 연구가 안 된 상태에서 청년지원청으로만 가야 된다고는 할 수 없지만 기본적으로 그런 조직체계가 만들어지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재익 위원 하여튼 조직체계는 필요하다?

○자문위원 김석호 예, 맞습니다.

○이재익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이명수 이재익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니다.

여러 위원님들 질의해 주셨는데 추가로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없으신가요?

그러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고요. 혹시……

○**신보라 위원** 자료요구 관련해서 의사진행발언……

○**위원장 이명수** 말씀하십시오.

○**신보라 위원** 자료요구 관련해서 지금 참여하신 정부 관계자분들께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토교통부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요청드린 자료와 함께 39세로 지원이 확대된 내용도 함께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국무조정실은 아까 제가 요구했던 자료와 함께 이번에 발표된 청년일자리 대책의 경우에 계획 단계에서 국무조정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와 향후 집행 과제에 있어서 국무조정실의 역할과 책임이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서 저희 의원실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 관계자 떠나셨나요?

그러면 저희 의원실에서 내용을 얘기하기는 할 텐데, 아까 지방정부 일자리 부서와 고용노동부의 소통 협의체가 고용정책협의회였다고 했는데 지난 3년간 회의 운영 현황과 그 협의회에서 청년일자리에 관련한 안건을 논의했는지에 대한 여부 그리고 올해 고용정책협의회의 운영 계획이 무엇인지를 저희 의원실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재부 혹시 계시나요?

기재부 과장님 계신데, 제가 지금까지 청년미래특위 회의를 해 본 결과 청년에 대한 여러 기준부터 제대로 조사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혼란과 애로가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계청을 비롯해서 청년 관련한 여러 통계들을 조사하고 발표하는 내용들이 있을 텐데요. 청년 관련 통계의 조사 및 발표의 형식, 범위, 내용들을 포함한 현황을 전부 취합을 해서 저희 의원실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수** 다른 말씀 없으시면 질의를 마무리하는데요.

신보라 위원님께서서는 서면질의까지 해 주셨습니다. 관련 기관에서 성실히 답변서를 작성해서 4월 1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오늘도 이렇게 오찬 시간을 훨씬 넘어서 회의를 진행하게 되어서 죄송합니다만 함께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특히 자문위원님들의 귀중한 의견, 정부 정책이나 우리 국회에서도 해야 할 일을 아주 잘 제시해 주셨고 앞으로 후속 논의 과정에서 의미 있는 자료로 잘 활용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고견을 주신 자문위원 한 분 한 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출석해서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정부 관계자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회의 준비에 애써 주신 전문위원실 직원분들과 각 의원실 보좌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다음 회의 일정은 간사님과 협의를 한 후에 별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통해서 다 들어 보셨겠습니다만 우리가 처음에 출발할 때 얘기했던 것들이 다시 반복되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그런 사항들이 정말 회의로 끝나지 말고 정부 정책에 그대로 잘 반영이 되기를 바라고, 특별히 계속 강조하는 총리실에 컨트롤타워 전담기구 만드는 것 또 새 정부의 청년정책 종합 정리가 되면 한번 보고를 해 준다 그랬거든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나중에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모두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2분 산회)

○**출석 위원(12인)**

권 칠 승	김 병 관	김 중 로	김 해 영
박 순 자	박 정	박 찬 대	신 보 라
염 동 열	위 성 곤	이 명 수	이 채 익

○**청가 위원(5인)**

김 중 훈	임 중 성	정 유 섭	정 인 화
채 이 배			

○**출석 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	이 상 규
전 문 위 원	홍 성 현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국 무 조 정 실	김 달 원
사 회 정 책 총 괄 과 장	

기획재정부 일자리경제과장	이	주	섭
고용노동부 청년여성고용정책관	김	덕	호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국장	이	건	정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김	홍	진

○출석 자문위원

- 김석호(국립대학법인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 김가람(한국청년회의소 중앙회장)
- 송보희(한국청년정책학회 학회장)
- 안현중(전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 대외협력팀장)
- 엄창환(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대표)
- 황인국(한국청소년재단 이사장)